第281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8號

國會事務處

2009年2月16日(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附議 担案件

(10시04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0시05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 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o 비교섭단체(민주노동당) 대표발언

○의장 김형오 오늘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 대표발언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 대표이신 강기갑 의원 나오 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 갑입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아주 심각합니다. 엊그제비가 오긴 했지만 해갈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식수난이 도래하고 농사조차 짓지 못할 비상한 상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허리채를 휘몰아친 경제난 못지않게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무릎 치며 탄식할 일이 닥칠 것입니다. 근본적 물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경제위기라는 긴 터널 속에 더해만 가는 양극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은 1% 재벌 특권층의 곳간 채우기에 급급하여 서민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10일 뒤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소박한 서민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신음하게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앞에 공당의 대표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생된 5명의 철거민은 누구보다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가난하였지만,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신세였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소박한 꿈을 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전형적인 서민이었습니다.

그들이 화염병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오를 곳도 없는 옥상 망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의 논리, 개발의 논리에 맞서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어떻게 했습니까? 벼랑 끝에 매달린 이들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까? 이들 의 목소리를 들어 주었습니까? 오히려 1600명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무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죽인 것도 모자라 검찰을 동원한 야만적 폭거를 또다시 자행하였습니다.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진압을 한 경찰과 용역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생존권을 지키려 한 철거민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희생된 영령과 유가족에게 사죄는커녕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철거민들이 자살테러를 했다는 기막힌 수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직접 사실 왜곡과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용산 참사의 실체를 덮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정권이 용산 참사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겠습니까? 이런 정권이 무슨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용산 참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와 특 검 수사를 통해 국가권력의 오남용의 문제를 백 일하에 밝히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현하고, 수많은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용산 참사의 배경에는 건설업체 배불리고 원주 민과 세입자는 내쫓길 수밖에 없는 뉴타운사업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뉴타운사업은 전면 중단,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서울 하늘 아래 서민들이 살 곳이 없어지고 제2, 제3 의 용산 참사를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뉴타운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뉴타운사업의 타당성과 문 제점을 살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을 손질해서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돈보다 생명이 귀합니다. 있는 자의 곳간만 채워 줄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행복이 더욱 소중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국민의 편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소통 없는 일방독주', '서민 없는 소수 특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불어 닥칠 민생파탄, 실업대란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이 살 수가 없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독선·독주·독단의 전횡을 중단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정책을 중단하십시오. 국정

의 대전환만이 난마처럼 얽힌 오늘의 난국을 타 개할 유일한 해법입니다.

'MB악법'이제는 국민들이 지겨워합니다. 신물 납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 아직도 MB 타령하고 있습니다. 서민 살리기 법안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미디어 관련 법, 은행을 재벌에게 넘기는 금산분리 완화, 휴대폰도 · 감청을 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이것이 서민 살리기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MB악법 추진할 그 어떤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지혜를 모아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한나라당,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꼭두각시가되기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고통받는 서민의 편에 서서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정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MB악법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이는 민의에 대한 배반이 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일 뿐입니 다.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만들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연말·연초 상황이 또다시 재연된다면 결사항전의 각오로 MB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입법전쟁은 국회를 넘어 전 국민적 저항에 불길을 당기게 될 것입니다.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120만 명에 이르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중소기업의 도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문질실업률은 무려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몰아칠 고용대란, 민생대란, 서민몰락시대 앞에 그 어떠한 반성도, 대책도 없다는 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4% 경제성장률에 기초한 예산을 잡았지만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인해 정작 서민 살리기에쓸 돈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도 10조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비상한 상황이고이에 따른 비상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이명박 정권은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 다.

민주노동당은 작년 예산안 심의 시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 보호를 위해 이미 15조 원의 서민구 제 SOS예산안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오늘의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잘 못된 예산편성 바로잡고, 불필요하게 늘어난 SOC 예산의 조기 집행을 적극 중단하여 '서민우선'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련된 예산을 주택·교육·보건 등 복지서비스 확대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금융 소외자 가 8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의 20% 이상, 경제활동인구 33% 이상이 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영업자의 폐업과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실업자 급증으로 금융 소외자가 대폭 양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금융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금산분리 완화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 문제 해결 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부업 상한 금리를 인하하고 법정 금리를 초 과하는 이자 징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진행되 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의료비·교육비·긴급생 계비 해결을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올해 7월이면 97만 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될 수 있 다는 논리를 들어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들고 나 왔습니다.

겉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걱정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 기간연장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제한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사상 최악의 고 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의 소득을 늘리 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해 야 합니다.

건설 토목 분야의 일용직, 비정규직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예고되는 고용대란 앞에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또한 제안합니다.

정부와 재벌도 진정성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합 니다.

정부는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 계와의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재벌도 수백조나 되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출연하여 위 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은 상황에서 급기야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야 하는 대결국 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패한 부시의 대북정책을 답습한 '비핵 개방 3000'을 내세우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한 대북 적대정책의 필연적 귀결입니다.

지금이라도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핵 개방 3000'의 입안자이고 통일부 수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국우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서해상에 서의 모든 군사훈련 계획을 잠정 취소해야 합니 다.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 의지를 공식 천명하고 특사 파견을 비롯하여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긴장이 고조되는 엄중한 국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에 동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정상 선언의 주역인 두 전직대통령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회도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긴장국면 해소와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를 광범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더 이상 이대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국민이 죽고 서민경제가 결딴이 나고 민족이 전쟁 위협에 빠지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한나라당은 아니라고만 합니다.

가뭄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도 그 위중함을 깨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은 이제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의무입니다.

모든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4월 재·보궐 선거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만듭시다.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어 이명 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 니다.

이를 위해 진보정치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진 보대연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MB 세력의 대 결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 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나 성공 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이 나라는 힘 있고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힘없고 가난한 서민에게는 한없이 모진 나라였습니다.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어찌 21세기 국민주권국가의 모습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통 없는 일방 독주, 막아 내야 합니다.

서민 없는 소수특권, 바꿔 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서민 몰락, 민주 압살, 남북관계 파탄 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민주노동당 항상 악전고투의 민생현장에서 그들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끌어안고 그 해결의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그 길에 돌밭도 갈아엎는 소처럼 거침없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수고하셨습니다.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계속)

(10시23분)

○**의장 김형오**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미경 의원의 소개로 서울 은평갑 지역구민 15인이 참석했으며, 이명수 의 원 소개로 충남 아산시 지역구민 22인, 그리고 정진석 의원의 소개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 의회 관계자 5인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은평갑 출신 이미경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이제 한 열흘 있으면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이 되는데 총리께서는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 니까? 점수로 치면 몇 점 줄 수 있다고 보십니 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정권의 업적을 점수로 내기는 힘듭니다마는, 지난 1년이 생각보다 굉장 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가가 폭등을 했고 또 유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국제 금융위기가 오는 과정에서 국제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경 의원** 점수를 물었는데 그냥 평가를, 평 점을 주셨군요.

MB 정부의 대표 공약이 뭡니까?

747 경제공약, 어떻게 됐습니까? 파탄이 났습니다. 국민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MB 정부의 경제는 747이었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747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이미경 의원** 아이, 뭐 긴 설명 하시지 마시고 요.

○국무총리 한승수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미경 의원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외부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여건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 의원** 7% 경제성장 얘기했지만 마이너 스 경제성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MB 대통령,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지요?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가 가진 자들,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세금 감면해 주고 철거민들,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에게는 물벼락과 살인 진압을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느 나라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 총리, 누구하나 진심 어린 사과 했습니까?

한나라당 일부 의원 주장대로 그 철거민들이 보상 몇 푼 더 받겠다고 떼쓰는 사람들이라고 칩 시다. 여기 많은 국무위원들, 임명될 때 '강부자 내각이다'이런 말로 불렸지요? 위장 전입, 부동 산 투기 의혹 있었지요? 최근에 임명된 장관까지 도 그랬습니다.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여러분들은 땅 투기해 도 장관되는데 이 사회 밑바닥 서민들은 얼마 안 되는 보상 좀더 받으려다가 불에 타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인가, 가슴속 깊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

용산 참사 가리기 위해서 '연쇄살인 강호순 사건을 적극 홍보하라' 경찰청에 지시한 행정관 사표 냈다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저도 그렇게 오늘 보도를 보 았습니다.

○**이미경 의원** 이게 사표로 끝날 일입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굉장히 부적절한 그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던 모양이고 그것으로서 당사자가 사표를 냈습니다. 저로서는 그 이메일 자체가 아주 부적절했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은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 의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은 상관의 지시 없이도 이렇게 단독으로 일을 합니까? 지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내각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총리, 처음에는 청와대가 '그런일 없다' 그다음에는 '사적인 메일이다'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는 '그냥 사표로 끝내자', 그렇게 이 문제가 얼렁뚱땅 넘어갈 일입니

까?

'악재를 악재로 덮고 간다'이것은 아주 비겁한 통치 행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지요? 사건 자체도 문제이지만 은폐 그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총리께서는 진정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직을 걸고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이 문제는 일단 그 이 메일을 보냈던 행정관이 사표를 내고 정부를 떠났기 때문에 일단락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 의원** 총리께서 그러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정부의 비극입니다.

그게 그 행정관 혼자의 문제입니까? 연애편지 보낸 겁니까? 청와대 메일을 통해서 보낸 거 아 닙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거기의 누가 알고 있었 고 누가 처음에는 잘못 은폐하려고 했고 이걸 밝 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총리가 대통령 에게 건의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툭 하면 법치니 원칙이니 말씀 하시는데 청와대부터 법치하고 원칙 지키십시오.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법치 운운하고 자기들한테 는 솜방망이 갖다 대면 기강이 설 것 같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이 사진 좀 보십시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명박 후보 시절 선거 광고 중의 일부입니다.

기호 2번 이명박이 아니라 기호 2번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노점상도 있고 용산 철거민들처럼 다 힘없는 서 민들입니다. 서민들 위한 대통령 되겠다 이런 뜻 으로 이거 만든 것 아닙니까?

이분들 대변하겠다고 하던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총리께서는 대사, 외교부장관 역임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와 내치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잘 보살피지 않는 지도자가 외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 비판한다고 네티즌 구속시키고 생존권 지키겠다는 사람들 죽음으로 내몰고 경찰 통제해서 정권의 호위대로 만드는 나라, 선진외교 할 수 있습니까?

총리, 남북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는데 정부 측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북한의 미사일 관계는 사실 군사 정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 릴 계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 는 긴밀하게 동맹국과의 관계 유지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할 때에 대한 대비 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총리의 인식은 언제나 그냥 평온하기 짝이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한반도 정세가 극한 상태로 가고, 그러면 외국자본이 철수하고 경제에도 좋 은 않은 영향 미칠 텐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에 막을 대책 없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북한의 의도를 저희들 이 정확하게 인식하기가 참 힘든 상태입니다마 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철 저하게 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할까 생각합니다.

O이미경 의원 곧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하는데 북한과의 긴장 국면 타개책으로 미측 에 제안할 내용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한미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결속이 잘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이번에 힐러리 국무장관이 옴으로써 이와 같은 관계가 더욱더 한 단계 격상되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 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우리 측이 이 긴장 국면을 타개할 안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준비했느냐'했는데 그냥 미국이 다 갖고 오기를 바라는 겁니까?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핵 포기하고 국교 정상 화하면 휴전협정도 평화조약으로 대체할 뜻을 밝 혔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힐러리 국무장관이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완전하고 또 검증 가능하게 핵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달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와 같은 힐러러 국무장관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핵 문제가 우선 빨리 해결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미 CIA 국장은 '북핵은 방어용 생존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총리는 어떻 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북한은 지금 어느 나라도 위협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그와 같이 핵을 통해서 자위적인 조치를 취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 아 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 의원 그러니까 방어용 생존수단이라고 본 CIA 국장 말에 동의하시느냐고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무슨 말씀……

○이미경 의원 미 CIA 국장이 북핵이 북한의 방어용 생존수단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동의하 시냐고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그것은 그 사람이 한 얘기기 때문에 동의한다기보다는 무슨 판단에 의해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O미미경 의원 자, 이제 이명박 정부도 지난 1 년의 대북관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동맹국인 미국의 정권이 새로 바뀐 올해가 향후 남북관계를 좌우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거에도 항상 중요했습니다.

○이미경 의원 정작 한반도의 안보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놓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부보다도 실용적인 외교를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북한 문제를 처리하게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잃어버린 10년, 과거 부정하기, 퍼 주기, 이런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있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6·15, 10·4 선언은 남북 대치 국면에서 화해, 평화로 가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정 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차원의 선언이었 다는 점, 그것을 이명박 정부는 부정했습니다. 그 렇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대화를 원했고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계속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 남북 간의 관계가 그것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참, 우리 총리님은 언제나 동문

서답하십니다. 왜 대화가 막혔나 하는 것을 물어 본 겁니다. 그게 $6 \cdot 15$, $10 \cdot 4$ 선언에 대한 부정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는 독재정권 시절에 체결했던 7·4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민족을 위해서 이롭다고 한다면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저 역시 6·15, 10·4 선언, 그 자체가 완전무결한 선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고 난 뒤에 6·15, 10·4 선언에서 보완할 점, 개선할 점, 더 통크게 나갈 점, 이런 점 찬찬히 따져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명박·김정일 정상선언 해도 되는 것아닙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과 맺었던 여러 가지 협정이나 또 내놓았던 선언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겠다는게 우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주저할 것 없이 대화의 장에 나오면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O이미경 의원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신뢰와 조건을 거기 깔지 않고 무시하고 나가기 때문에 안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과거를 수용하고 통 크게나갈 수 있는 방법, 개선할 점, 이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미관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고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을 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국익과 불합치 되는 정책이 있을 수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우선고려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당연합니다.

○이미경 의원 총리,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비 공식적으로 아프간 파병 요청 받은 바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프간 파병에 대한 이와 같 은 요구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미경 의원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미경 의원**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 한일 간 아프간 재건사업에 공동참여 한다, 이런 합의 있 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경찰교관을 파견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경찰 파견이 민간 재건복구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마는 경찰교관 파견이 민간 재건복구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과 면밀 히 연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경 의원 지난 1년간 정부가 줄곧 아프간 추가파병 없다, 이렇게 단언해 왔는데 입장이 좀 바뀐 것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지금 추가파병을 받은 사실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입장 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의원 파병이라는 것은 '군사력' 생각하시고 '그것은 없다'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찰관 파견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받아들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클린턴 장관 방한 시에 우리 군을 파병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요청해 온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 측에서 사전적으로 무슨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2년 전에 윤장호 하사가 폭탄테러로 순직했고, 샘물교회 선교단 23명 인질사건으로 2명이 희생됐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불가피하게 철군 한 일이 엊그제인데 다시 파병을 한다, 우리 국 민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정부는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의 고귀한 목숨 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총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총리, 정부는 올 1월 미국과 제8차 방위비분담 금협정을 맺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 의원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거의 전부 내면 잘한 협정입 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그것을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전부 내는 것이 아니고 방위비분담금 중에 일부를 아마 LPP(연합토지관리제도)에 활 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 에 그것을 완전히 국민의 부담만을 얘기하는 것 은......

○이미경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상당한, 여기에 거의 많은 부담을 우리가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은 인정 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이 자금은 아시다시피 SOFA, SMA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협정을 통해서 한미 간의 합의를 통한 그 부분의 분담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따져 물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얼마이고 한국 부담은 얼마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아마 한…… 정확하게 이것은 외교부장관한테 직접 한번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미경 의원 묻는 것은 제가 생략하고 그냥 말씀드리자면, 2004년에 정부는 기지 이전에 10 조 원 정도 들고 우리 측 부담은 5조 5000억 정 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답변했습니다. 그 러면 4조 5000억 정도가 남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부담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 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당연합니다. 나머지 미국이

○이미경 의원 그 정도 들겠다 하고, 우리는 5조 5000이면 남은 돈은 미군이 부담하겠다, 거의 반반 부담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정확히 5조 원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담당하는 외교부장관하고 정확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것이 5조인지 6조인지 4조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경 의원 정부가 낸 보고서를 보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의 미 의회조사국 보고를 보면 미 의회는 미군기지 이전에 약 1조 원가량 부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 까?

○국무총리 한승수 미국 의회 어디에 나와 있는 지 제가 잘······ ○이미경 의원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기술적인 문제는 이것을 직접 협상했던 외교부장관에게 질문해 주시면 더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경 의원 이제 거의 다 물어갑니다.

한승수 총리께서도 이 문제는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 의회 보고입니다. 1조 원가량 내겠다 하는 보고입니다.

우리는 5조 5000억을 부담하는데 미국은 1조원만 부담한다 하면 남은 3조 5000억가량은 누가부담하는가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조 드는데 미군은 1조만 낸다 하면 남은 돈은 우리가 거의 다 부담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초기에 물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피땀 어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방위비분담금이 2000년부터 1조 원 넘게 축적되어 왔다고 이상희 장관이 말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했지요? 기지 이전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O이미경 의원 결국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 비용 대부분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우리 정부가 내고 있 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지금 주한미군 측이 보유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 잔액이 약 1조 119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서울 소재 이외에 전국에 잔재한 미군기지 를 통합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 즉 LPP협정 인......

○**이미경 의원** 예, LPP협정이라는 것이 주한 미 2사단 이전 비용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자금의 분담만을 규정하고 있지 자금의 조달 방법까지 여기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LPP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요구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용이 양해된 후에 대체시설자금에 대한 비용 분담 기준으로서 요구자 부담 원칙이 합의되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 서로 간에 이게 위배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했다고 하는데, 그 양해했다는 문서가 있는지, 회의록만 가

지고 법적인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 따져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 양해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10조가량 드는데 미군은 1조만 낸다 이거 문제 있다 하는 얘기를 우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서 1조 1000 억 원을 전용해서 축적하는 동안 국회도 몰랐고 국민들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알기에 정부는 2007년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서 미 측과 많은 협의와 연 구를 거듭했지만 분담금의 LPP 사업 사용을 2000년 LPP 사업 협의 개시부터 미국 측에 설명 을 했고 우리 측도 2004년 LPP 협정 개정 이전 부터 이를 양해해 왔던 것으로 또 현실적인 여건 이 아니냐 그걸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 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2000년부터 해 왔다 하는 그런 것을 그동안은 계속 부정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처음 알려 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드러내 놓고 그렇게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속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총리!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앞으로 유럽과 한국에서 7만 명의 병력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 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언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저 는……

○이미경 의원 2009년 1월의 미 회계감사원 보고 자료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

○**이미경 의원** 이거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하십 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9만 명 중에 몇 명이 한국의 미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거기 나와 있습니까?

○이미경 의원 예,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미경 의원 이렇게 미군 수가 줄어드는데 방위비분담금은 5년 동안 협상이 고정된 거다, 미군 수가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이것 잘못된 협상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한미 간의 방위비협정, 많은 개선점이 있어야됩니다. 이번 8차 협정 내고 국회에 비준 요구하

는데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비준안이 지금 국회에 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한미 양국간의 관계를 존중하는 뜻에서도 무난히 이 문제를 잘 협의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많이 지적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라고 합니다. 전대미문의 통합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과거 정 권 부정하기는 위기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이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입니다.

북한이 안보적 긴장감을 갈수록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을 좀체로 떨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은 분명히 무언가 치밀하게 계획한 목표를 향해 의도적으로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순차적이고 계획적이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에는 근 한 달째 중국 어선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고, 그동안 평소 위장해 있던 북한 군의 해안포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연평도 코앞에는 함정 70여 척과 전투기 150여 대가 집중 배치되고 있습니다. 동해 쪽으로는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심각한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정치적 사건을 일으켜 왔습니다. 1998년 8월 대포동 1호를 쏜 직후에는 주석제를 없애고 김정일 정권을 공식 출범시켰고,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 3개월 뒤에는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속에 후계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로 김정일 위원장의 67번째 생일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북한 내부로서는 가장 체제의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며칠 전 전격적으로 군 수뇌부를 교체하는 인사까지 단행 했습니다.

저는 선불리 이 상황이 어떻게 번질지를 예단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북한 정권이 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 다. 북한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그것이야 말로 지금 저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의 원천입니다.

지금 우리는 IMF 때와 맞먹는, 그 이상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튼튼한 안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아주 조그만 군사적 사건도 경제적 위기 극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이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절대 흥분하거나 과잉 대응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를 단지 북한의 허세로 치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든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말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 등과의 공조하에 잘 해 나갈 것으로 믿으면서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 리의 답변이 두 가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듭 묻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 남북관계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무조건 안심하라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진실을 알려 주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부의 태도가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비롯한 한반 도의 군사적 이상 징후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종 합진단을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군사정보는 대외비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서 지금

이와 같은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한미 간의 탄탄 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의원 지금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 본체를 조립 중에 있고, 과거 2006년의 경우를 보면 미사일을 발사거치대에 옮긴 뒤 20일 만에 발사가 되었거든요. 미사일 거치대의상황은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북한이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미사일은 어떤 형태라고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개량형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량형 미사일은어떤 걸로 알고 계시죠? 총리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대포동 2호 미사일은 2006년에 시험발사에 실패했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추측건대 그것을 개량해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한 게 아니냐 하는 정도밖에 저희들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정진석 의원 2006년 7월에 실패했던 것이 대포동 2호인데 사정거리가 6000~7000㎞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량형은 그것보다 2배 정도 긴사정거리, 한 1만 6000㎞, 예를 들어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성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아직까지 실험을 하지는 않았고 또 우리로서는 정확한 정보를……

○정진석 의원 좋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요격하겠다고 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자국 영공 내가 아닌 공해상에서 요격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국제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제3국의 미사일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는 미국의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요격 방법이나 장소, 국제법 등에 관한 문제를 여기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의원 좋습니다.

아까 이미경 의원 질문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요청을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좀더 총 리께서…… 이것이 저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나 국익 우선의 판단에서 이것을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국익이 최우선이지요.

○정진석 의원 그런 점에서 좀 분명한 국가이익에 대한 관점을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클린턴 민주당 정부에 이어서 부시 공화당 정부가 8년 집권했고 이제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할 때 흔히들 공화당 전 정부와 비교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8년 전 클린턴 행정부 때와 비교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그때 당시에 주미 대사를 지내시면서 직접 제1차 북핵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애쓰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가 전격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폭격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그때 우리 정부가 매우 긴장을 했었고 이것을 만류하느라고 애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처럼 미국 민주당 정부도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결국 채찍을 쓸 때는 매우 강경한 조치를 쓴다는 것 그리고 페리 당시 국방부장관의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해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당시에 6월에……

○정진석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자들이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매우 유연하게 일관할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인식의일단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국무총리 한승수 다만 여기서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8년 전의 클린턴 행정부하고 똑같이 대북정책을 취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은……

○정진석 의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당시에는 북한의 핵이 지금처럼 이렇게 개발 진전이 많이 나가 있지 않은 상태였고, 쌍무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4년 10월 갈루치가 중심이 돼서 제네바합의서를 이끌어 냈습니다마는, 지금은 6자회담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 물론 클린턴 정부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오바마 행정부도 이 6자회담 을 잘 활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총리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금명간 방한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핵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is prepared to eliminate)"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정진석 의원 '그러면 관계 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부시 공화당 정부의 '핵을완전히 폐기하면 관계 정상화에 나서겠다'라는취지의 기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것은 자칫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북・미 관계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망상을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매우 조심스러운 발언이라고 보는데 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사전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6자회담의 2단계 인 불능화 단계가 지금 진전을 못 하고 있고, 불 능화 단계가 끝나면 핵 폐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소 사이어티에서 활용한 그 용어, 동사는 '북한이 지 금 6자회담의 불능화를 진행시키고 핵 폐기 단계 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진석 의원 지난 1월 30일 조평통, 북한의 조선평화통일위원회지요. 남북 간의 모든 정치·군사 합의를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남북간에 맺었던 모든 정치적 군사적 합의를 일방 폐기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렇다면 6·15, 10·4선언도 지금 무효화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조평통 성명에서 무효를 선언한 범주에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이

포함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마는, 남북 간의 합의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수정 폐기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해서 수정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의원 사실 6 · 15 선언 이후에도 북한 은 계속 약속을 어겨 왔습니다.

우선 김정일 답방 약속부터 어졌지요. 핵실험을 감행했고 서해상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전 정부는 북한 정권이 계속 약속을 어기는데도, 깨어질 약속도 지켜야 된다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해협에 북한 상선을 통과시키는 것도 잠정적으로 좀 중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나약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김현희 KAL기 폭파범, 1987년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가 최근 주장한 바에 따르면 "과거 정권 시절에 우리 정보기관이, 국정원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앞장서서 대한항공 폭파사건의 진실을 좀 왜곡시키려고 시도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국가정보원이 나, 김현희를 MBC에 출연시켜 가지고 바보를 만들려고 했다. 국가정보원 간부가이민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런 증언을 한 바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인지는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국정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것은 정부 차원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〇국무총리 한승수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는 김현희 씨가 KAL기 858호 폭파 주범이 확실하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2007년 10월 2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김현희 씨 사건을 둘러싼 외압 문제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해 말부터 국정원 안에서 관련 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오 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진석 의원** 총리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전쟁 당시 실종되었던 미군 유해를 모두 찾을 때까지 발굴 작업을 멈추지 않 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강 수색작업도 저희들은 목격했고요.

최근에는 58년 만에 북한 땅에 묻혀 있던 전사자 유해를 발굴해서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지금까지 2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국군포로 문제, 6·25 납북자, 그이후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북한 측에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처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죽어서까지 국가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6·25 전쟁 중 실종 사망해서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13만여 구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채혈을 통해서 채취한 DNA는 5700여 개인데 전사자 가족들에 대한 DNA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저는 생 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확보방안이 정부는 마련되어 있나 요?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는 전적으로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의 의견과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 국 안에 있는 실종된 혹은 납북된, 전쟁 중에 전 사한 분들의 가족들의 DNA를 채취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정부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6・25 전쟁 당시 납북자들에 대한 명단 확보, 생사 확인도 지금 되지 않고 있고요, 정부는 그래서 하루빨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명단을 확인하고 생사 확인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요.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정진석 의원 제가 작년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좀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 ○정진석 의원 총리 들어가시지요.
- ○**국무총리 한승수** 감사합니다.
- ○정진석 의원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인택 장관님, 장관에 임명되신 후에 외교·통일·안보 분야 첫 답변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청문회 치르시느라고 곤욕을 좀 치르셨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른바 비핵 개방 3000 구상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당사자로 저는 알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지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 ○정진석 의원 선거 때 이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결국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까지 대표적인 대북 정책으로 굳어진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북한은 이 정책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고 또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또 비난의 화살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비핵 개방 3000 구상이라는 게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이것 비핵과 개방이 3000이라는 경제 지원의 전제조건인가 이것을 한번 좀, 우선 묻고싶습니다. 전제조건입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 문제를 자꾸 선 핵폐기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이 것은 병행해서 나가는 그런 단계적 포용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정진석 의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대북 경제 지 원 정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니까 비핵화가 동시에 병행되면서 단계적으로 북한이 그렇게 응해 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 ○정진석 의원 그런 기조라면 역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이나 포용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 정부의 여러 대북 정책들의 기조는 다 포용 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진석 의원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또 국민들이 잘 이해 못 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의 정책 홍보가 매우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생각도 듭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 있는 것 같지만 남북의 교역량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오히려 증대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 ○정진석 의원 교역 건수도 30.3%나 증대됐고 교역 참여 업체 수도 335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화가 단절되어 있지만 북한은 자기가 필요한 경제적인 협력 이런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물밑에서 경제 교역이 활발하게 지금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홍보를 좀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벌써 다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추모 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나라, 북한에 일방 적으로 장기수들을 보내면서 납북자와 국군 포로 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나라, 자기 국민 보호를 포기해서 애국심이라는 말도 꺼내기가 머쓱해진 그런 나라, 국민은 더 이상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민 도 나라를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지난 10년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위해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희상** 정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수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장 아산 출신 자 유선진당 소속 이명수입니다.

어김없이 봄은 가까이 와 있고, 국회 파행의 국민적 질타 속에 다시 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우 리 국정은 아직 춘래불사춘의 상황이라고 보여집 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구했던 이 충무공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415년 전인 1594년 갑오년 2월 16일 바로 오늘 이 충무공께서는 "임금과 백성을 속임 이 여기까지 이르니 국사가 이러고서야 매사가 잘 될 수가 없다. 우러러 탄식할 뿐이다"라고 난 중일기에서 우국충정을 강조하셨습니다. 서세동점이 한창이던 100여 년 전 국운이 처한 비감한 상황을 다시 반추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어려움이 되 풀이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 다.

저는 작년 5월 금강산 총격 사건과 독도 문제 로 대정부질문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 문에 나서면서 그동안 총 3회에 걸쳐서 30여 명 의 의원들께서 내건 300여 건 이상의 의견이나 국정 제안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 조치하겠다' 하는 답변은 일회성일 뿐 그 후속 조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질의응답 자료조 차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별다른 성과도 없고 개선도 안 되는 이런 일회성 대정부질문과 답변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깊은 의문과 우려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국정이 정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건지, 나라가 정말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어렵다는 이 시기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 이 제대로 조금이라도 추진되고 개선되기를 바라 면서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콘트롤타워가 없다, 위기관리 시스템이 고장 난 게 아니라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취임 2년차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 야의 소위 콘트롤타워는 누구며, 위기관리 시스 템의 구체적 기구나 실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의 현안 토의와 조율을 위해서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이 참여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기대응 상황센터를 두어서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전파하고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국무총리 한승수 청와대에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위원장,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외교부장관입니다.

○이명수 의원 국정원, 외통부, 통일부 각각 개별적인 이런 움직임이 이루어지는데 이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말로만 뭘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지마시고 정말 이런 전체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작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 중 한 방법으로 소위 NSC를 청와대 대통령 직할로 환원해서 NSC를 시스템화하고 상설화하고 정례화를 재추진할 의항은 혹시 없으신지 또 현재 청와대에 있는 국정위기상황센터하고 NSC가 보다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지난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 조정을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가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상 자문기관이 정책 조정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것은 월권이다 하는 지적 때문에 지난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이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외교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주요 외교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지금 현재 경색되고 긴박한 남북 상황에 대해서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최선을 다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가장 최근에 언제 회의가 열렸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저는 지금 그 위원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청와대에 있고 하 기 때문에 이따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직접 질문 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위원은 아니어도 이 중요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총리가 직접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정말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비핵 국가입 니까, 핵보유국입니까?

공개하기 어려운 답변은 여기서 제외하셔도 좋 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국들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1718호입니다마는, 명시되어 있듯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자, 그렇다면 미국이 3년 전 한국 정부에게 미국의 목표가 북핵의 '완전 폐기정책'이 아니라 '비확산 정책'이라는 레드라인 (Red line)의 변경을 통보했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학계에서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아시아를 방문하기 위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 관이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연설한 내용을 보면 엘리미네이트(eliminate)한다, 폐기시킨다 하는 용 어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는 것은 폐기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도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그렇다면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이 사실을 당시 한나라당 대표한테도 통보를 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국방위원장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언제 또 열리게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아시다시피 6자회담 대표들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 미국 대표가 아마 이라크 주재 미 대사로 내정이 되는 것 같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후임자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설의 보도에 의하면 전 주한 대사하던 스티 븐 보스워스 대사가 특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서는 언제 이것이 열리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하루속히 6 자회담이 열려서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자, 그렇다면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북핵의 완전 폐기입니까, 비확산 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완전한 폐기입니다.

○이명수 의원 물론 완전한 폐기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명수 의원 그러나 그 회담의 진행과정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비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지난번에 이회창 총재께서 비핵개방 3000에 대해서, 이 자리에 통일부장관 계십니다만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정책이자 구호이다', 이 비핵 개방 3000을 주장해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거둔 성과가 무엇입니까? 실적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북한으로부터 대화에 대한제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과의 대화는 아시다시피 완전히 차단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북한이 대화에 나온다고 그러면 이 정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그러니까 실적이 사실상 아무 진전된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비핵 개방 3000을 주장을 했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 그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대북정책의 원칙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하지 않고는 이것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하루속히 대화에 응해 주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원칙을 내걸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도 없고 사실 실효성이 없으면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도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까지는 거의 1년이 걸렸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 이 대화의 장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글쎄요,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이 없다면 남북한 간의 상생도, 공영도 없다 이 런 신 북한독트린을 천명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지금 북한 핵 문제는 단계적으로 폐기, 이제 불능화시키고 그다음에 폐기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폐기하지 않으면 대북 관계를 다 끊겠다 하는 것 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정책이 아닐까 생 각을 합니다.

○이명수 의원 이런 실효성 없는 그런 비핵 개 방 3000을 주장하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 관해서 는 정말 우리가 무책이 상책이 아니라 무책이 없 을 무자 무책이 되고 있어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콘텐츠가 빈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해 봅니다.

앞서 대북 특사를 주장하셨는데 이 대북 특사 이외에 남북한 간의 극단적인 군사 대결과 무모 한 도발을 억제하는 대중국·러시아 국제공조할 수 있는 특사 파견하는 문제, 이런 긴장 완화와 관련한 목적의 선제적인 실용외교를 한번 구사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저희들이 주재 대사도 갖고 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항상 대통령실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특사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정기적인 채널을 통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이 이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문제는 정기적인 채널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대북 특사도 좋지만 대북 특사 이외의 중국이나 러시아의 특사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 국과 러시아와는 저희들이 북핵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조율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다음은 과거사와 주변 영토 문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 문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 인민정부의 공식 포털 사이트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는 아예 표기조차 없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국무총리 한승수** 중국······

○이명수 의원 중국 인민정부의 공식 포털 사이 트에 동해가 없습니다. 동해란 명기가 제주도 밑 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독도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마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 마…… 동해가 그러면 무엇으로…… 다른 이름으 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하 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도의 경우는……

○**이명수 의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본해 로만……

○국무총리 한승수 독도가 아마 조그만 지도의 경우는 표시하기가 너무 작은 섬이기 때문에 종 종 세계지도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개선이 되고,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자, 올해 안중근 의거 100주년이 고 내년은 한일 강제 합방 및 국권 침탈 100주년 의 해입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사전에 치밀하게 하고 있는데 한일 합방 100 주년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고 일본 측의 이런 선제적인 추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우리로서는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이와 같은 일이 1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마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과거의 어려웠던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 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아니, 일본은 먼저 시작을 했고 요. 우리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를 좀 서둘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또 3·1 운동 90주년이고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이어서 내년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와 같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내년 사업이 지금 기획이 안 되어 있다면 안 되지요.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습니다.

2010년은 간도협약을 체결한 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간도협약에 대해서 외교적인 문제니 이런 구실을 내세우면서 정말 100년 동안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영토 협약 차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와 민족자존의 입장에서 간도협약에 관해 무효라는 선언적 의미라도 천명하고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 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역사

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또 하나, 러시아가 우리 옛 영토 인 녹둔도……

혹시 아시나요, 녹둔도?

- ○국무총리 한승수 예.
- ○이명수 의원 녹둔도의 반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0년 러시아 측에 섬의 반환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1990년 이후 20여 년 동안 러시아 영토로…… 지금 녹둔도를 반환받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반환 노력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녹둔도 문제는 그동안 두만강이 변하면서 토사도 많이 쌓이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증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역사적인 자료 수집이나 관련 전문가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녹둔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연구가 우선 있도록 하겠습니다.

O이명수 의원 글쎄요, 민간 차원에서 녹둔도 토지를 임대해서 활용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한미 FTA와 관련한 변화에 관한 어떤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국무총리 한승수** 없습니다.
- ○**이명수 의원** 아직까지는 없지요?
-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명수 의원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힐러리 장관이 오는 목적 중의 하나가 내면적으로는 이 FTA 협상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재협상 통보 요구 시 우리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철저히 세워 놓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재협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미국 측에서 아직 온 적도 없거니와……

○**이명수 의원** 아직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어떤 변화 요구에 대해서……

○국무총리 한승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그와 같은 요구가 있다고 그러면 절대로 거기에는 응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힐러리 국무장관이 와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 FTA는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무역이나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마는 한미 관계의 독특한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인 관계도 있고 하기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전략적으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클린턴 장관에게설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총리의 말씀 꼭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여러 가지 논 란이 많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더 잘 하라는 그런 격려와 채찍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부 폐지 주장 안 하셨다고 그랬지요? 인수 위 3인 중에 포함됐지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안 했습니다.
- ○이명수 의원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습니까, 암묵적 동의한 겁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그 당시 인수위 시절에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고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 ○이명수 의원 인수위의 바로 그 분과위에 있었는데 여기에 관여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저희……
- ○이명수 의원 그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언론 보도가?
-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전적으로 보도가 잘못 된 것입니다.
- ○이명수 의원 하여튼 그 문제는 두고두고 저희 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탈북민이 문제인데요.

이명박 정부가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적극적 인 노력을 하는 것은 보입니다마는 탈북자 문제 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탈북자가 다시 강제로 북 송되는 것을 막는 것,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런 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해외 탈북자의 인 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이명수 의원 이를테면 탈북민들이 국제 난민

이나 정치적 망명 신분·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한 방안도 있는데 그런 방안도 포함해 서 검토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꼭 해서, 이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지금 해외 체류 탈북자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숫자를?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추산은 여러 가지 추산이 있습니다만 3만 명, 5만 명, 이렇게 추산 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이명수 의원 3만 명 내지 5만 명, 이게 엄청 난 숫자거든요.

우선 다시 강제로 북한에 되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이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 정착한 뒤에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다시 한번 강화해 야 될 것 같습니다.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수 의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국방부장관, 정말책임이 무겁습니다. 그 책임 통감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이명수 의원 자, 이런 최근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정말 의연한 대처, '안심하십시오'이 말씀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반의 대책을 정말 다시 한번 강구하고 확인해 주십시오.

북한의 이런 최근의 일련의 무력 군사 시나리오, 종합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대비를하고…… 앞서의 질문하고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상희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1월 17일 총참모부 대변인의 발표 또 1월 30일 조평통 발표 이후에 군사 대비 태세를 증가하고 또경계 태세를 지・해・공 모두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군은 분명한 입장을 설정해서 이에 대 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수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하고 행동에 의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 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또 억제를 우선으로 하여 평시에 상대적 우위 전력을 현장에 배치해서 도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군은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상정해서 현장 지휘관이 현 장의 합동 전투력으로 현장에서 최단 기간 내에 승리하여 작전을 종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 비하고 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오늘도 모 일간지에 '연평도 코 앞에 북한 함정 70여 척, 전투기 150여 대를 집 중 배치했다'이런 보도가 있는데 특히 서해안 NLL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2차 연평대전 때 희생된 6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가유공자 예우가 안 되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오. ○이명수 의원 지난번 연평대전 때 희생자 6명 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가유공자 지정이 안 되었 다는, 예우가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그것은 국방부와 보훈 처에서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명수 의원 아, 그 답변은 지난번의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입니다. 지난번의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 또 반복하실 겁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문제는 분명히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명수 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 반복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뭐가 달라졌는지 하는 것을 여 기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 ○이명수 의원 북한의 미사일 문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북한이 미사일 카드를 언제 사용하고 이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포괄적인,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하여 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1월부터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에 있고……
- ○이명수 의원 이번 주가 제일 고비 아닙니까, 이번 주?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한미연합 감시자산으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명수 의원 우리 자체 정보 능력으로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우리 자체 능력뿐 아니라 미국의 능력까지를 포함하여 한미 간에……

○이명수 의원 미국의 능력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 다음 문제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보 능력을 가 지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가지고 있어야 되겠 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우리도 부분적으로 갖고 있고 미국도 부분적으로 갖고 있고 그러한 구체 적인 어떤 수집 수단에 관하여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 예, 또 한 가지 제일 문제가 수 도권 문제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또 지금 말씀하신······

○이명수 의원 자, 제가 또 하나 묻는데 수도권, 인구가 사오십% 집중된 수도권, 북한의 장사정 포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 는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수도권, 제일 안보가 취약한 곳인데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의 장사정포에 관하여는 아시다시피 수도권을 제일 타격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는 북한이 만일장사정포를 발사한다면 이것을 실시간에 탐지하여 그 발사 위치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수도권 얘기입니다, 지금?

○국방부장관 이상희 수도권입니다.

○이명수 의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정말 믿음을 주시기를 말씀 드리고요.

2012년 전시작전권 재검토, 재협상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전시작통권 재검토와 관련 해서는 현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에 국가 전략적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012년에 전환한다는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SCM과 MCM에서 한미 양측이 전략적 전환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해서 여기에 어떤 보완사항이 있다면 이를 전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간다는 그러한 방침 속에서……

○이명수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별다른 큰 보 완사항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현재까지는 특이하게 보완 사항이 식별된 것은 없고 2009년에 최초 능력평 가를 하고 또 2011년에 최종 능력평가를 하게 되 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 다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수 의원 이 분야 전문가들 걱정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보완사항이 없는지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그리고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문무대왕함을 파견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소말리아해적을 격퇴하고 전원 무사 귀환할 그런 만반의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소말리아 해군 함정 파견은 국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아울러서 우리 선박을 해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무를 갖도록 파견되는데 이를 위한 함정의 정비, 장병에 대한 교육, 임무 숙달 훈련 또 교전규칙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질 없이 임무가 수행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장관 답변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외통부장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 어젠다를 쭉보니까 어젠다 설정 자체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적과 그런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할린 동포 2, 3세 귀국사업에 관한 문제를 질문드립니다.

현재 2800여 명의 사할린 영구 귀국 동포가 충남 아산 등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 3세들에 대한 겁니다.

일본은 이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 부분에 인색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사할린 2, 3세 동포 귀국사업에 대한 입장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사할린 동포 2세, 3세들은 제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출생된 사람이고 전부 러시아 국적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러시아정부 측과의 교섭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습니다마는 1세 귀국 시 2, 3세들 이 동반 귀국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 을 해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그 답변도 오래된 답변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벌써 해외, 같은 안입니다 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되는데 장관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챙겨 주 십시오.

그 다음에 영구 귀국 동포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와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소 요되어서 불편함이 많다 이런 얘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대폭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법무부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그리고 최근 중국 관광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중국 부유층의 개인 관광 규제를 대폭 풀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관광객 유치 목표도 적은데다가 여러 가지활동이 미흡합니다.

우리도 40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부유층의 개인 관광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외통부가 중심이 돼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유관 부서와 협력을 해 가지고 중국인들 에게 단체 관광 비자뿐만 아니고 개별 관광 비자 도 신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 니다.

○이명수 의원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잘하시는데,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 이런 부분을 좀 보 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알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나 극복해야 할 위기는 존 재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국가 안보를 걱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정부의 외교·통일·안보력이 제 역량 이상으로 발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경제 분야 못지않게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한 어떠한 다이어그램도 없고 도형도 없고 지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사용했던 툴들, 해법이나 해결책 이 오늘에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모든 가능성에 철저 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한테 확실하 게 주는 것입니다.

이 충무공께서 잠 못 이루고 우심전전야(憂心轉輾夜)했던 그런 진정한 우국충정의 마음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이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평택갑 원유철 의원입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변화를 내세운 미국의 새로운 출발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많은 희망과 기대 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연일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개성 관광을 전면 중단하였고, 금강 산 지구 통행 제한 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조평통이 남북 정치·군사 합의 사항 및 서해북방한계선 조항을 폐지한다고 일방적으 로 선언하였습니다.

단계적으로 긴장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데 생일 폭죽을 대포동 미사일로 터트리는 것이 아닌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무수단리 미사일 시험장으로 미사일 발사 장비를 이송하였습니다. 때맞춰 지난 12일 군 수뇌부를 강경 세력으로 전격 교체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 시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한미 군사 정부에서는 적

의 발사 시기를 물론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이 발사 시기 자체는 북측이 선택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유리한 시기에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을합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시기를 단정하는 것은현재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 어저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가 한국형 MD를 건설하신다고 발표했지요, 국방 부에서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국방부에서 그것을 공식 발표한 적 없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러면 그 언론 보도는 어떻게 된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마 추측 보도일 것입니다.

○원유철 의원 추측 보도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원유철 의원 알겠습니다.

최근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강경 행동에 나설 경우에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했고,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북한이 대포동 2호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요격에 나서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협의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정부와 협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 국무장관이 자국의 위협에 대하여 자국의 가용능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이 정도 발언이 나올 정도면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그 전제가 기자회견에서 답변한 것인데 06년도나 그 이전에 미사일경보가 발령되면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응체제를 갖추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인가, 따라서 게이츠 장관은 우리의 능력을 대통령 부통령국무장관 또 NSC 보좌관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것이고, 그와 같은 것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서 국방장관으로서는 지극히당연하고 또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 우리 국방부가 좀더 긴밀하게 미국 측과 공조체제를 확실히 갖추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는 정보공조체제 및 군사대비체제는 국방부에서 또 우리 정보본부에서 매일 화상을 통하여 미측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방부를 믿어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에서 요 격을 하고, 또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는 등 국지전 이 된다면 이것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현재 군에서는 매일 정규전 징후,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징후 또 이러한 국지도발에 관한 징후를 매일 분석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북한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원유철 의원 다시 아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는데요.

그러면 한국형 MD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한국형 MD라는 것은 저희가 한반도의 좁은 종심과 또 산악지역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해서 한국 자체로 KAMD, 그러니까 한국 공중 및 미사일방어를 위한 우리자체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유철 의원 지금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시스템은 현재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유철 의원** 언제까지 갖추어 나갈 생각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우리가 공중방어에 대해서는 지금 공군 전력으로 이미 갖추어져 있거나 더보강해 나갈 것이고, 미사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패트리엇을 지금 전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패트리엇 전력화와 관련하여……

○원유철 의원 그것은 미국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닙니다.

○**원유철 의원** 우리 한국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 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약 48기를 지금 전력화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 에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으로 볼때 실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러면 그 시기를 언제까지 완벽 하게 준비대세를 마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패트리엇 24기는 금년에 전력화가 되었고, 나머지 24기는 내년에 전력화 가 될 것입니다.

○원유철 의원 패트리엇에만 의존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으로 봐서는 적의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주로 우리는 하층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패트리엇을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아무튼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한국형 MD는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철 저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잘 알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북한 미사일에 의한 위협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한은 사정거리 500㎞를 넘는 미사일 약 1000여 기를 실전에 배치해 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KN-O2 지대지 미사일은 미군기지를 위협하기 위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KN-O2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은 전부 한반도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한미군기지라고 단순히 적시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군사표적은 다타격대상이 될 것입니다.

○**원유철 의원** 특별히 KN-O2는 미군기지를 대 상으로……

○국방부장관 이상희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판단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원유철 의원 그렇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 ○원유철 의원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해주와 옹진반도 지역을 비롯해서 북 방한계선 인근 해안기지에 배치해 놓은 해안포를 지상으로 전진 배치하고 훈련 횟수도 늘리고 있 다고 합니다.

해안포로 우리의 고속정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한 장사정포로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안 포나 또는 미사일이나 또 함정 간의 공격이나 또 함정에 있는 함대함 미사일로도 도발을 할 수 있 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에 대해서 평시부터 더 상대적으로 우위의 전 력을 유지해서 억제하고 있으나, 만일 억제 실패 시에는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이 가용한 전투력으로 최단기간 내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 들을 예하 지휘관들한테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차 연평해전에서는 소요시간이 14분 걸렸습니다. 2차 연평해전은 18분 걸렸습니다. 마라서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치열한 교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장 지휘관에게 필요한 권한들을 위임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원유철 의원 북한 도발에 우리 군이 3배 정도로 응사하게 돼 있지요. 지금?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원유철 의원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유엔사·연합사 정전 시교전규칙과 합참 작전예규에 의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그것이 개인의 자위권이 되었든 부대의 자위권이 되었든 그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의하여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되어 있지 몇 배를 사격한다는 교전규칙은 없습니다.
- ○**원유철 의원** 적정하게 대응한다 이거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 ○원유철 의원 본 의원은 만약 북한이 서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해온다면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아주 강력한 응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고, 또 연평해전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우리 바다를 지켜낸해군장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봅니다.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실 준비는 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
-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 **○원유철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한 바가 있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원유철 의원 이 공동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핵을 갖지 않아야 하고,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원유철 의원 북한이 이미 핵을 갖고 있는데 비핵화 공동선언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자동 폐기된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비핵화 공동선언을 어느 한 측이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폐기되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준수하

였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핵 재처리시설, 또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심지어 핵실험까지도 실시하기는 했으나 그들이 그러한 위반을하였다고 하여 남북한 간에 비핵화 공동선언이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추구되어야하고, 그래서 6자회담에서도 우리가 북한의 핵폐기를 기본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공동선언이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서로 약속에 대해서 합의를 지켜나갈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공동선언에 관련하여는 남북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지난번 6자회담 시 9·19 공동성명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은 어느 경우에도 준수될 수 있도록 북에게 요구하고, 또 강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유철 의원 예.

아무튼 본 의원의 판단은 남북한 비핵화 공동 선언은 원인무효가 됐다고 봅니다.

2014년에 우리가 한미 원자력협정을 재협정하게 되어 있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그것은 제 부처 사항 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원유철 의원**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핵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평화적인 목적의 이용은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유철 의원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미 CIA 국장지명자의 발언이나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시한 미 정보기관들의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2008년 10월 기자 회견을 통해서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 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유 사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이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잘 아시겠지만 군사적으로 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하여 대비태세를 확립 해 나갑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는 이상 또 핵개발을 소형화시키기 위한 노력까지도 하고 있는 이상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핵을 상정 하여 대비태세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 로 샤프 장군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 ○**원유철 의원**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우리 군도 동일합니다.
- ○원유철 의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원유철 의원 북한은 지난 10년간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악용해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만 증강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993년부터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북한의핵무기 보유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북 핵전략을 다시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군의 전략적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감안해서 미국의핵우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가진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평화의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우리 정부는 핵확산금지조 약 즉, NPT와 아까 말씀하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려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또 6자 회담을 통해서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토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원유철 의원** 2012년 4월 17일에 전작권 전환 이 되죠?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원유철 의원** 그런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불식시켜 주실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2012년 4월의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하여는 물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십 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는 현재의 연합방위체제 에 버금가는 공동 합동작전체제를 긴밀하게 협조 가 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이미 신문에도 보 도가 되었지만 정보와 공중전력 문제는 지금과 같은 연합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각 작전 사 간에도 필요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여 그 협 조체제에 어떤 공백이 생기거나 또는 허가 생기 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기간 중에 우 리에게 필요한 보완전력이나 증원전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 측이 현재와 같이 증원하고 지원한다는 것을 작년 10월 SCM에서도 분명히 명시적으로 양측이 합의를 하였고 또 지금 만들고 있는 공동작전계획에도 그러한 것이 다 반영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공백이 생기리라고 장관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러면 정보하고 공군 분야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다른 분야는 누차 보고드 렸습니다마는 한국 합참이 서포티드가 되고, 주 도적인 위치에 있고 주한 미 작전사령부가 서포 팅이 되는, 지원적인 위치에서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공동작전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체제에 버금간다고 생각하시 면 될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원유철 의원 미8군사령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국에 계속 주둔하게 되는 겁니까, 지휘부가?

○국방부장관 이상희 미8군사령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 육군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한국의 작 전사령부로 할 것이냐 미8군사령부를 그대로 현 체제를 유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직 충분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유철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8군사 령부는 한국에 계속 남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하 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건 결정되지 않은 사항 입니다.

○원유철 의원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원유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미사일 발사준비설 등 북한 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정보에 대한 수집과 분석능력은 원활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서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통일부장관으로 새로 취임하셨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하셔서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가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의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 능력 또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인원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필요한 부분은 보강을 하고 기능이 약화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축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 상인 비핵 개방 3000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비핵화 과정이 더 디어질 경우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 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원유철 의원 북한도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정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도 해 주 셨는데 정말 북한의 비핵화가 이 구상의 전제조 건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비핵 개방 3000 정책이 선 핵폐기론이라든지 대북 강경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포용정책이고 또 비핵화와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북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런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잘해 주시고요. 향후 어떤 기조로 남 북관계를 풀어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겸 허히 앞으로 수용을 하고요. 열심히 홍보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옴으로써 저희 정책을 북한에게 진솔하게 설명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앞으로 추진하는 데 또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 니다.

○원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리실 산하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지원 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 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요즘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방부에 있는 이전사업단과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지원단은 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 지원과 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미군기 지 이전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한미 군사동맹을 위한 전략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물론이고요, 미군이 떠나는 지역과 또 이전하게 되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때 진정한 의미의 안보 토대가 마련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한미군기지 이전 시기가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2008년, 미2사단 이전은 2011년까지 당초에 마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으로 늦춰졌고 최근에는 다시 용산은 2014년, 미2사단은 2016년까지 이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연되다 보니 미군이 떠나게 될 동두천·의정부·포천·파주시와 같은 반환 예정 지역과 미군이 이전하게 될 평택 지역 모두 직· 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고덕국 제신도시사업은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같 은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또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총리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기지 이전사업이 한미 간에 조속히 확정이 돼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더 이상 그 지역 주민들이 주한 미군 재배치에 따른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서 주 한미군 재배치, 또 주한미군 이전 정책이 연착륙 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총리 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또 관련부처에 여러 가지 지휘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에 한 가지 꼭 이것은 예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당초 2008년 반환 예정이었던 미군기지를 우선 반환하고 동두천 지원 도시 내 산업단지 50만 평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미군기지 반환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간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잘아시다시피 정부로서는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내에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은 하지않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총량 범위내에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주한미군기지의 재배치에 따른 새로운 한 미동맹의 출발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자 합니다.

최근에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듯이 미국은 주한미군 근무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동반율을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5년 후쯤 완공될 평택기지에 주한미군 가족은 물론 한국인도 함께 공부하는 개념의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하였습니 다. 그는 한국 정부가 학교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미국 본토에서 선생님을 구 해 오고 한국 학생도 15~20%까지 받아들이겠다 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은 용산기지 이전과 함께 메릴랜드대학 평택캠퍼스를 신설하고 50 대 50 비율로 한국 학생 입학을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한미군 재배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택 지역이 새로운 한미동맹의 상징도시로 자리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평택기지가 완성이 되면 우선 재한 미군들의 생활이 많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복무기간도 자연히 지금보다 길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한미동맹 관계의 탄탄한 기초를 더욱 더 탄탄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또 지금 방금 존경하는 원유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택기지에 메릴랜드대학 평택캠퍼스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교류 협력의 위축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신규사업 기회 제공 등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보다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민족 공존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경색 국면을 돌파할 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 현 정부의 실세 인사를 포함한 초당적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클린턴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이었던 카터가 막혔던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연 적이 있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물꼬를 틀 수만 있다면 그것이 여든 야든, 전직 대통령이든 현 정부의 실세 인사이건 간에 누구든 막론할 수 있 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명박 정부 가 추구하는 진정한 실용과 국민통합을 큰 틀에 서 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이러한 저의 제안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원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 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14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갑구 출신 신학용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 모든 면에서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전면대결 운운하면서 으름장을 놓던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는 사이에 남북관계가 타임머신 타고 16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입니다. 1993년 3월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에는 다시 전쟁의 불길한 전조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가슴 졸이면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천하태평입니다. 북한의 행보가 오바마 정부에 대한 헐리우드 액션에 불과하다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행여이명박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오판한다면 우리국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문제는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짐이 무겁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대북 문제는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로 냉정과 열정 사이의 그 무엇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두의 운명이자 숙명인 것입니다.

한가로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말만 되풀 이해서는 국민의 신뢰, 얻을 수 없습니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최고권력자는 누구지요?

- ○국무총리 한승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알 고 있습니다.
- ○**신학용 의원**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권력자는 요?
- ○국무총리 한승수 최고권력자라기보다 우리나라의 국가원수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 ○신학용 의원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1위는 SD, 2위는 MB, 3위는 시중이라는 말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이명박 대통령이 국 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신학용 의원 저도 이런 루머가 발생하지 않았

으면 합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우리 총리의 역할만 정말 돈독히 잘해 주신다면 이런 루머가 나올 수 없습니다.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의 책임 있는 정치가 정말 아쉽습니다. 제 충고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최선을 다하라는 충고로 받 아들이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지금 북한, 권력 세습 작업 중이라는데요. 들어 보셨습니까? 장남 김정남 대신에막내 김정운을 후계자로 추대를 하고요, 지방 각도당에 교시까지 내렸다는데 우리 정부가 정말파악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후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보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북관계 정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학용 의원** 그냥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남북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인터넷상에서 지금 남북 2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루머가특히 초·중·고생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사실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들이 퍼져 있다면 대단 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신학용 의원 예?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학용 의원** 예, 없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나도는 것은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인터넷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특히 최대 조회수가 1만 7423건인데요. 올해 중학생 되는 여학생인데 아침에 인터넷을 보니까 1위가 남북전쟁 운운이랍니다. 기막힌 일이에요. 이런 분위기까지 온 데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평화를 지키는 것, 관리하는 것은 우리 정부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지금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 한승수 인터넷상에서 유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소문의 근거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시대에 이와 같은 옳지 않은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자제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용 의원** 그러면 이것도 또 처벌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신학용 의원** 이것 처벌해야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처벌 그것은 잘 모르 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로서는 인터넷을……

○**신학용 의원**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국무총리 한승수 참 좋은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이 불 안을 조장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용 의원** 자, 그러면 북한이 만일 대포동 2호 발사하고 미국이 요격을 한다면 이것 국지전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그와 같은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상정해서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 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용 의원** 적절치 않다? 그러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글쎄 일어날는지 요격을 할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상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용 의원** 위기는 위기지요? 아닙니까? 남 북문제 위기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위기라기보다는 북한이 미사 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우 리나라도 그렇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불 의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서해안도 대치 상태입니다. 무력 충돌 지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행위…… 지금 북한과 핫라인 도 없지요? 끊어졌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예, 남북 대화 창구도 지금 다 끊어졌습니다. 그저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우리로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언제든지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 에

○**신학용 의원** 아니, 하겠다고 하면 모멘텀을 만들어야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핫라인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핫라인이든 그렇지 않으면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그와 같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아니, 핵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 가 남북 경협 안 하겠다, 북한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만 하겠다

무슨 건덕지를 줘야지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금 기다리는 정책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북한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 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비핵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 거의 정부도 추진해 왔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비핵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북한하고 의 대화를 하겠다 했는데 비핵 하기 전이라도 지 금 대화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대화에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면 한국으로서는 충분히 이와 같 은 대화에 임할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가 촉발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위협이라는가 가능성은 북한에서 촉발한 것이기 때문에우리로서는 북한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하고대화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참 답답합니다, 지금.

비핵 개방 3000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안 되고 남북 경색이 되고 있는데 통일부장관 인사청 문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노력하겠답 니다.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지 그쪽에서 뭐가 나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아까도······

○신학용 의원 지금 대통령께서도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뭐가 생길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총리께서 똑같이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기다린다기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북한이 정확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오전 질문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정부에서도 거의 1년을 기다려 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인내력을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대화 재개의 제의가 올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남북 긴 장 관계가 최고조에 와 있습니다. 1년을 기다렸 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릴지, 한미공조에 의존해 가지고 풀려고 그러는 자세가 정말 안타 깝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숨 졸이면서 정부의 대응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언제든지 북한과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 한 번만나게 주선할 의향 없으십니까?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대북 특사 지금 보내세요, 지금! 그것 왜 못 보냅니까?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특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활용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있는 것이기때문에 특사를 이쪽에서 보낸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보다는 그 전 단계인 남북 당국자 간의 대화 재개가 우선 필요하지 않나, 우선순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용 의원** 아니, 남북대화장에 나오지를 않는데 자꾸 남북대화하면 된다니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6 \cdot 15$ 선언 $10 \cdot 4$ 선언 이행 보증하시고요. 정상회담 하자, 하고 제안하시면 뭔가 길이 열릴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의를 해 놓은 것에는 모든 선언과 또 협정을 협의하고 토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미북한 당국에게 얘기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한 당국이 이와 같은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예, 기대하십시오, 계속.

자, 제2롯데월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 공항 옆에 초고층 건물 짓는 것 이것 은 상식적으로도 국민들도 불안해 합니다. 여론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여론조사보다는 아시 다시피 이것은 작년 4월에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전경련이 경제 살 리기 차원에서 제2롯데 재검토를 건의했고, 또 국방부와 공군은 그 뒤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 고 대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서는 롯데 측이 서울공항의 군작권과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인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고 또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의 간사부처인 행안부에 통보해 옴에따라서 이것이 총리실은 서울시의 이러한 요구가본 안 관련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재협의에 상정이유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난 1월 7일에 본회의에 앞서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신학용 의원** 아니, 국민 여론조사 한번 해 보 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국민 여론은 글쎄, 제가 여론조사까지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따가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실 때 한번 물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대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학용 의원 지금 이 건이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사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60%가 반대하고 있다고 나 와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데 그……

○신학용 의원 14년간 국방부가 반대했지요? 그 렇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14년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는 조건이 맞아지지 않았을 때에는 반대를 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안전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맞출 때에는 공군이나 국방부의 입장에서도 과거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요건이 100% 완비된다면 당연하지요, 안전도 하고 경제도 살리고 다 좋습니다. 문제는 국방부가 여기에 감 놔라 팥 놔라 할 근 거가 있습니까? 고층빌딩 짓겠다는데 국방부가 왜 나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국방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고 고층건물을 지을 때에 그것이 항공 안전 상, 특히 공군의 경우 안전하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따질 때에는 공군과 국방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관여하게된 것입니다.

○신학용 의원 자, 이렇습니다.

국방부로서는 관여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2007년도 6월 28일, 7월 26일 날 행정협의조정위 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도 건축 206m로 제한한다 둘째, 비행안전구역 개선 등 법적근거를 조속히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왜? 개입할 근거가 없으니까 개입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라고 해 가지고 공군본부가 2007년 10월 달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 아시고 계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데요, 이게 그 뒤에 아시다시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군용항공기지법이 통합 개편이 됐습니다, 작년 9월일입니다마는.

그래서 비행안전만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고층 건물도 건축 가능한, 이와 같은 법이 개정이 됐 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의원 당연하지요. 지금 비행안전만 염려 안 된다면 지어도 된다는데 지금 비행안전 때문에 국방부도 권한이 없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방부가 개입할 수 있게끔 법개정해라라는 것까지 냈는데 2007년 10월 달에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그때 이미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혹은 될 확률이 높기 때 문에 허가해 준 그런 결과가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지는 않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굉장히 규제를 푸는 이와 같은 법입니다. 비단 이것은 제2롯데월드하고 관 련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규 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 제2롯데월드를 짓는 지역 도 완화가 되고 그렇게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과 거에 국방부나 공군에서 걱정하는 여러 가지…… ○신학용 의원 총리 잘못 아시고 계세요. 이 법 에 의하면 그 지역은 국방부와 협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지역입니 다. 그래서 이 법안을 제출함으로 해 갖고 브레 이크를 걸려고 그런 것이지요. 그 브레이크를 걸 려고 그러는 찬스를 2007년 10월 이후에 법안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법안이 폐기되었는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니까 합참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합참에서 지금 뭉기고 있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서 존경하는 신학용 의 원님, 이것은 국방부장관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 에 좀더 보충질문해 주시면 자세한 말씀은 국방 부장관이 아마 답변을 잘 드릴 겁니다.

○신학용 의원 아니, 정부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들어 가지고 14년간 반대해 놓고 지금 정권 바뀌었다고 해 준다는 것, 국민 정서도 지금 헤 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은요……

○**신학용 의원** 그렇지 않다니요? 그러면 안전

○국무총리 한승수 여건을 그냥 놔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을 바꾸는데에 필요한 이와 같은 경비를 롯데월드 측에서부담을 하기로 하고 또 법 자체가 규제로부터 완화로 되고 있는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의원 지금 모 국방장관 출신 의원님도 내가 없는 1년 새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가, 이렇 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특혜밖에 될 수 없어요. 안전을 담보로 해서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자, 그러면 공군도 아직 이것 허가해 준 것은 아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공군 쪽에서는 합의를 다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비행안전의 객관적 검증 여부가 나오면 그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거기에 대한 게······

○신학용 의원 지금 허가 났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초적 인 시설 보완을 지금 다 합의를 한 것으로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러니까 시설 보완을 하면 된다 그러는데요, 비행안전의 객관적 검증 여부 한번 봅시다.

2007년도 7월 18일 날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실무자들이 C-130 수송기를 탑승하고 타워팰리스 건물을 제2롯데월드로 가상해가지고 체험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시 탑승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 았는지 체험 결과가 어떤지 모르시고 계시겠네 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러니까 타워팰리스라면 지금 강남에 있는 거기 얘기합니까?

○신학용 의원 예.

○국무총리 한승수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국방부 장관이 자세하게 알 테니까 국방부장관한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의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할 시간이 없고요.

그때 체험 비행 속기록을 만들었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제 가······

○신학용 의원 한번 알아보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신학용 의원 자, 그런데 이 속기록이 뭐 있는 지 없는지 제출하냐 못 하냐 지금 이 문제는 나 중에 다시 다투어 볼 것입니다.

자, 당시 대부분 탑승한 사람들이요, '너무 위험하다, 제2롯데월드는 불가하다'라는 결론을 냈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그 보고서를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지금 이 중요한 내용을 말이에 요, 직접 비행기를 타보고 가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고 느꼈는데 3도 바뀐다 해 가지고 그 위험이 괜찮다고 할 리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것은……

○신학용 의원 그리고요,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타워팰리스 주민들이 정말 격분해 가지고 관계당 국에 항의도 많이 했답니다. 그 내용도 확실히 하셔 가지고요, 좀 결과 보고해 주세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또 한 가지 이거 자꾸 안전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군 자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 님.

군과 관련된 문제는 국방부장관이 더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신학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저보다는 국방부장관에게 질 문해 주십시오.

○신학용 의원 안전 문제에 대해 이것만 물어보

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비행사고는 총 24건인데요. 그중에 대부분이 실전훈련 비중 증가로 조종사 과실 및 정비 불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습니까, 안 뒀습니까? 고려 안 했지요?

- ○국무총리 한승수 왜 고려를 안 했겠습니까?
- ○신학용 의원 이게 지금 국방부 자료입니다.
- ○국무총리 한승수 당연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학용 의원 자,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반드시 비행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검증기구를 만들어 놓고 시험비행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총리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국무총리 한승수 그 문제는 이미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험비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검토는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학용 의원 이 중요한 결론,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할 수가 없다' 라고 결론이 났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도외시하겠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총리,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국무총리 한승수 그 타워팰리스 쪽의 비행기가 어떤 각도로 어느 고도에서 날랐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비행이었는지 저는 얘기할 수가 없겠고……
- ○신학용 의원 그러면 그 당시 국무총리……
-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보고서를 받은 뒤에 제가 검토를 하고 나서 검토 결과를 신 의원님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학용 의원 자, 총리 그러면 그 당시 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원들, 그 실 무자들 다 허수아비입니까? 그것을 판단하고 결 론을 내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탄 체험 결과를 '나는 모른다, 그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겠다, 앞 으로는 그런 것 안 하겠다'하시면 곤란하지 않 느냐 이거지요. 이미 다 끝났다 그러시고……
- ○국무총리 한승수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롯 데월드와 관련된 서울공항의 경우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험도라든가 이것을 측정을 했고 만일 위험이 있을 때이것을 피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 대안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롯데 측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타워팰리스인가 하는 아파트를 돈 비행기가 어떤 항로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는 과정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서는 비행기가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 근처에서는. 우선비행기 뜨고 앉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착륙할 수있는 여건도 안 된 데서 비행기가 빙빙 한번 돌아간 것하고 실제로 공항에서 내리고 뜨는 것하고는 시뮬레이션이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학용 의원 아니, 지금 시뮬레이션은 거기서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좁은 장소에서 하는 것아니에요? 그런데 시뮬레이션 가지고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겁니까? 실제로 타보고, 그거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 하시겠다고 하는 총리의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물론 시뮬레이션이라 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 건물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있는 것처럼 상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시뮬레이션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학용 의원** 예,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비핵 개방 3000, 우리 장관이 만드셨 지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제가 만드는 데 주도 를 했습니다.
- ○**신학용 의원** 통일부 폐지에 찬성을 하셨다면 서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적 없습니다.
- ○**신학용 의원** 거기 사인 다 하셨다는데?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 폐지 문제에 대해 서는 저는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고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신학용 의원** 자,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지금은 순차론을 포기하시고 아마 같이 병행론으로 돌아서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돌아선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것은 선 핵폐기론 이런 것과는 거리가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핵화와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남북이 공존·공생·공영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포용정책이라고 제가 말 씀을 누차에 드렸습니다.

○신학용 의원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자꾸 희석을 시키는데요. 요번 인사청문회, 비리의 백화점이라는 내용도 신문에나오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우리 통일부장관의 잘못된 생각, 비핵 개방 3000이때 알려진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남북 관계를 조율할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정말 자격 미달입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그런 자리 문제가 아 니고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예, 그러면 1988년부터 약 20년 간 대북정책의 일관된 기조, 포용과 번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우리 지난 한 20여년 정부 의 대북정책 기조는 포용정책이 일단 기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용 의원 번영은 아니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번영도 들어갔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럼 포용과 햇볕정책의 차이는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난 과거의 햇볕정책은 기조는 포용정책을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그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북핵 문제가 해결이 미흡했고 또 그간에 남남갈등 문제라든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과도 있고, 물론남북대화를 열었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신학용 의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어떤 것과 어떤 것 차이 름......

○**신학용 의원**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기본적으로 용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햇볕정책도 포용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신학용 의원 그렇지요?

우리 한나라당에서 좋아하는 퍼 주기가 얼마만 큼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겠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은 퍼 주기와도 물론 관계가 일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학용 의원 그렇게 인식하시면, 지금 남북이

평화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얻는 우리 경제적 이익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 요.

○**신학용 의원** 지난 10년간에 대북 퍼 주기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신학용 의원** 정확히 지금 한 5조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우리 남북관계가 이렇게 긴장됐을 때의 그 비용, 지금 여러 군데서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약 60조 원, 앞으로 10년 간 남북 긴장 국면 조성 때문에 일어나는 손실이 약 60조 원이랍니다.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걸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 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과문한 탓인지 그 60 조가 어떻게 추산이 되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신학용 의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조사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드리면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살펴보겠다고 하셔야지 난 모르니까…… 그럼 국회의원이 준비한 자료는 뭡 니까? 이거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추정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나 추산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학용 의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준비한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하면 되지 '난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지금 부정하는 거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한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일거에 부정해 버리면 우리 통일부장관의 자세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통일부장관 현인택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진정성을 가지고 하신다 그러셨는데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합시다.

대북 삐라 오늘 또 뿌렸습니다. 이것 도움되겠습니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에요. 아시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누차에 걸쳐서 자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점을 밝혀 드립니다.

○**신학용 의원**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재할 생각 없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북 삐라는 민간단체들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써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정부로서는 그간에 누차에 걸쳐서 그것이 현재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자제를 요청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용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오 신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의원** 한나라당 서울 용산 출신의 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인택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인택 장관님께서는 많은 식견과 경험을 가지 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잘 수 행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회에 와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간사를 2년간 하면서 경험한 어떤 의견을 서로 공유한다면 앞으로의 과제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충정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김정일 정권과 한나라당의 관계가 어땠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예를 들 수 있습니 다마는 제가 경험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07년 5월 17일 남북 열차 시험 운행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진영 의원 제가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유일하게 시험열차에 탔었어요. 그래 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환영 속에서 이 열차가 분단 후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개성에 갔습니다. 아주 즐겁게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이 점심 먹는데 제 손을 잡고 주민들이 있는 테이블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 가지고 뭘 하나 그랬더니 권호웅─북측 대표단 단장이었지요─내각참사한테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한나라당 간사진영 의원이라고요.

그랬더니 권호웅 내각참사가 저한테 하는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한나라당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밥맛 떨어집니다.' 이래요.

저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평생 처음 들어 봤는데 이것이 뭐 모욕을 받았다 이런 아픔보다는 남북 관계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일그러진 모습이 있구나 하는데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딱 한 달쯤 있다가 평양에서 6·15 기념대축전이 있었지요. 원래 안 갔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은 가지 말라 그러는데 박계동 총장 여기계시지만 박계동 의원님하고 정병국 의원하고 셋이서 한나라당 대표로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갔지요.

그래서 인민문화궁전에서 행사를 막 시작할 참 인데 갑자기 중단됐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결국 은 박계동 한나라당 대표의 주석단, 거기는 주석 단이라 그러더라고요, 연단이라 그러지 않고. 주 석단 입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 고 이틀간을 실랑이하다가 결국은 못 올라갔어 요. 그리고 저희는 참석도 못 하고 그냥 호텔에 머물다가 비행기 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거기 참석을 못 했다는 아픔보다는 그 당시에도 그 안에서도 남남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한나라당을 주석단에 참석시키려고했느냐 하는 남측 대표를 비난하는, 대한민국에서 간 대표단 사이에서도 한나라당을 비난하는목소리가 있어서 더욱더 가슴 아팠어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김정일 정권은 한나라당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적대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그러면 현 장관께서는 왜 김정일 정권은 한나라당에 이렇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진영 의원**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김정일 정권은 그렇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한나라당은 계속 북핵 폐기를 대북 관계 에서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있었지요, 항상.

남북 관계를 하는 데 북핵 폐기는 굉장히 중요 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 장관님께서도 취임사 때, 청문회 때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진영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진영 의원 그다음에 한나라당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항상 침묵하지 않고 시정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행동을 같이하기를 요구했지요. 유엔에서 항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통과시켰지요, 인권위원회나 총회에서.

지난 정권은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불참하고 기권했지요. 그러나 한나라당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번에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서 공 동제안국이 됐고 또 찬성표를 던졌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진영 의원 그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한나라당은 납북자·국군포로의 송환을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그 주장을 하면 회담 분위기가, 남북 회담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져서 실제로 주장을 잘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군포로의 송환, 납북자의 송환은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야 된다는 주장을 죽 해 왔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진영 의원** 일본인 납치 문제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고 있습니다.

○**진영 의원** 일본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현인택** 일본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의원 일본은 이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 장이 인정을 했지요, 납치했다는 사실을? 그러나 13명 납치했다고 그랬고 일본이 파악한 것은 17명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해결 안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6자회담에서 북한 지원을 거부하고 있고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할 때도 강력하게 요구했지요. 이 납치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테러지원국 해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도 납치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했지요.

그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 한나라당은 인도적 지원 시 항상 투명성을 강조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진영 의원** 이 점에 대해서 현 장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영 의원** 취임사를 들여다보면 이 점은 약간 유연성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진영 의원** 한나라당 의견이 다 통일되어 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로 이런 주장을 했다 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항상 인도적 지원을 조건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 을 많이 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조건이라고 하기에는……

○진영 의원 약간 상호주의적인……

○통일부장관 현인택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 런 인도적 지원을 할 때 북한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반드시 기계적 상호주의를 말 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영 의원** 그런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주장했 지요, 한나라당은?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진영 의원 한나라당은 주장했는데, 현 장관님 은 이 점에 대해서도 취임사에서 약간 유연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입장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영 의원 그다음에 한나라당은 항상, 앞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북한에 대해서 개혁·개방만이 유일한 북한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이런 주장을 여러 번 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의원** 그래서 비핵 개방 3000도 들어간 것 아닌가요? 개방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아닌가 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개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개방시키겠다고 한 그런 개방의 의미가 아니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임을 말씀드립니다. ○진영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지적해 보면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온몸으로 막았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고개를 끄덕임)

○**진영** 의원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온 몸으로 안 막았으면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소 원으로 여기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미 이루어졌 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라당이 몸으로 막은 거예 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현 장관님은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유지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진영 의원** 지금 현 장관님의 생각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유지해 오던 어떤 입장과는 비슷하다이렇게 보면 되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 니다.

○진영 의원 결국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인데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민주주의의 가치,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인권이런 부분을 상당히 앞세웠던 거고 지난 10년의정부는 이런 가치는 약간 옆에다 두고 대북 교류협력을 더 우선적 가치로 뒀던 거라고. 그래서이 두 가치가 계속 충돌해 왔고, 그 충돌의 연장선상에 오늘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진영 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의 남북 관계 경색이 마치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우리가 피땀으로 지킨 민주주의의 가치, 북한주민의 인권 이런 부분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얘기다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가 치도 지켜야 되지만 대북 관계도 원만히 진행시 켜야 될 책임이 따르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 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진영 의원 그래서 현 장관님이 해야 될 과제는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를 계속 지키면서 대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제 눈에는 그 양 가치를 같이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북한이변하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장관님께서 제가 못보는 그런 길을 보고 있다면 이건 다행이지요, 굉장히.

그러나 제가 보는 한은 우리의 가치도 지키면

서 남북 관계도 발전시키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 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하여간 그 두 가치를 정말로 다 잘 살려서 대북 관계를 앞으로 정말 상생과 공영의 길로 가져가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영 의원** 아니, 그런 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유념하고, 앞으로 강구를 하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진영 의원 그게 현 장관님의 과제인데, 제가보는 한에는 그런 양쪽을 다 달성하는 길이 안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선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2분의 1 성공밖에 할 수가 없어요. 2분의 1 성공밖에 못 하고 2분의 1은 반드시비난에 직면하게 돼 있다고요.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가 남남갈등을 없 애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남남갈등을 가지고는 어떠한 경우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법 보면 나와 있잖아요. 법 보면 나와 있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말이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남남갈등이 남북갈등보다 더욱더 심각한 장애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북한은 항상 남쪽을 이용해서 남쪽을 제박하려는 말이지, 이남제남의전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남북 관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정 부나 여야의 국회 또 시민단체가 모여서 남북 정 책의 공감대를 이루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북쪽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 를 내고 우리 내부로는 여러 가지 토론을 하더라 도 말이지…… 그런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 남남갈등이 우리가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을 해소하는 길이 남북 문 제를 또한 해소하는 길이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이 대북정책 협

의체 문제는, 정말로 여야가 이 문제는 공감대를 갖고 합의를 해 주신다면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진영 의원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 는,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획기적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많이 보고를 받으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지도에 나온 게 용산 미군기지 지도입니다. 저 지도에 보면 본체부지가 있고요. 위쪽에, 북쪽에 메인 포스트(Main Post)가 있고 밑쪽엔 사우스 포스트(South Post)가 있는데 그게 메인 본체부지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노란색으로산재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용산 미군기지는, 우리가 물려받을 기지가 남쪽・북쪽에 본체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산재부지가 이렇게 세군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서울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 야 된다'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 까?

○국무총리 한승수 서울을 아름답게 꾸미고, 정말 천연자원을 가장 아름답게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꾸며 가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용산공원 같은 것을 잘 가꿔서 후손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영 의원 지금은 서울에 특징이 없기 때문에서울의 이미지를 제가 보건대는 남산도 있고 강도 있어서 자연과 인간의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용산 미군기지터를 어쨌든 보존해서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겠다이런 시민들의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군기지 터를 꼭 매각해서 이전비용으로 써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 내에. 끝없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건 총 리가 되건 장관이 되건 다 설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 팔아야 된다고.

그래서 몇 년을 싸우다가, 몇 년을 싸우다가 드디어 합의를 한 거예요, 2007년도에 오세훈 서 울시장님하고.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민을 대표 해 가지고 이것 처분하지 말자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면 본체부지는 처 분하지 말고 공원으로 하고 이건 진짜 후손들한 테 물려주잔 말이지, 그다음에 산재되어 있는 부 지는 할 수 없다, 시민단체는 이것도 공원화해야 된다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매각해서 이전비용으로 쓰더라도 본체부지만은 후손들한테 물려주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법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들 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체부지, 아까 지도에 나왔던 본체부지에 대해서는 일체 한 평도 용도 지역 변경하지 말고, 처분하지 말고 후손들을 위 해 주잔 말이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만들어 놓고도 몇 달 안 돼서 말이지요, 노 무현 대통령 때 12월 31일자로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거예요. 법에 보존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처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넣었다면 그 시행령 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하여튼 존경하는 진영 의원 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는 용산부지 중에서 본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정한 대로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에는 추호의 차질도 없 이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의원 만에 하나 현재 법을 가지고도 시행령을 바꾸든지 시행령을 그렇게 해서 본체부지일부라도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정부 내에 있으면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설득시켜 드릴게요.

○국무총리 한승수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혼을 좀 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시행령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의 정신을 살려서 시행령을 고치든가 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우려가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의원 그래서 전 총리님께도 제가 그 질 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 절대 처분하지 않 는단 말이지, 다 약속을 해 놓고 계속 처분하려 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리님께서 반드시 우리 서울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 후손들을 위해서 본체부지는 그대로 보존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꼭 약속을 지 켜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정말로 존경하는 진영 의원 님께서 정말 천연자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좋은, 세계에서 이와 같은 도시가 없는데 서울의 아름다움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정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의원** 우리 존경하는 한승수 총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윤성** 진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운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태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출신의 강운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고 고달프십니까?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앞으로 4년 후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날 무렵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한 번쯤 밤잠을 설쳐 가며 고뇌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만의 꿈이 아니라 국민도, 야당도 함께 꾸는 우리 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처절하게 고민해보셨습니까?

총리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대외 관계에 있어서 가장 답답한 분야는 역시 남북 관계의 경색이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강운태 의원 지금 정부는 원칙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자세인데 이렇게 기다리면 언제쯤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리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이 시점에서 언제쯤이라고 가늠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은 북한이우리들의 남북대화에 대한 자세를 잘 이해하고하루속히 대화의 장에 나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나오면 남북 관계는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운태 의원 남북 관계의 역사를 보면 현 정부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쉽게알 수 있습니다.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을 누가먼저 제의했지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하신 것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러셨습니다.

○강운태 의원 그리고 1972년 남북공동성명서 채택은 어떻게 됐지요? 우리가 먼저 간 거란 말이지요. 그 이후에 1985년에 시작한 이산가족 상봉,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95년 인도적 지원의 시작, 2000년 6・15 정상회담, 2007년 10・4 정상회담 등등 남북대화는 언제나 우리가 먼저제안하고 우리가 먼저 한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대응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기 때문에 고뇌 속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로서는 항상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어서 남 과 북이 화합해서 같이 잘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강 의원님하고 똑같 은 생각입니다.

○강운태 의원 더구나 지금은 북핵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등 한마디로 초긴장 상태인데 이런 때 핫라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북 관계가 현실적으로 꼬이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역시 저희들은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서 아직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문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운태 의원 제가 볼 때는 결국 6·15 공동선 언과 10·4 공동선언을 무시한 데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무시했다기보다는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의할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진실성을 이해를 하고 하루속히 대화의 장에 나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강운태 의원 그런데 그것은 정상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 총리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시하지 않았다면 통일부의 업무계획이나 아니면 금년도 예산에 당연히 후속조치 계획이 조금은 반영이됐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남북 관계는 기다리는 자세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사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여러분도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은 총리께서 외교 관계에 밝으시기때문에 미루지 말고 총리께서 직접 대북 특사가되셔서 한번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지금 존경하는 강운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북 특사 파견은 남북 관계의 타결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 중의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여러 가지를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고 사실 아직까지 총리가특사로 이렇게 나섰던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운태 의원 왜 정원식 전 총리 가셨잖아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분은 특사라기보다 아마 관계장관 회의를, 총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운태 의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한번 총대를 매 보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심각 하게 해 보겠습니다.

○강운태 의원 다음 한미 FTA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원래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에 처리해 주기를 희망했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랬으면 했었습니다.

○**강운태 의원** 지금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 각하시나요?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이것은 이미 국회 외교 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에서 결심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운태 의원 정부는 작년 12월 29일 미국의 한 업체에 한미 FTA에 관한 전략적 자문과 로 비를 의뢰한 사실이 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 것을 제가 자세하게 보고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미국 정부에 등록된 로비스트를 모든 대사관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운태 의원 금년 2월 말까지 계약금 12만 달러로 계약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자문을 해왔거나 또는 로비의 성과는 좀 있는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아마더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운태 의원 그런데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는 로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유달리 공정성과 투 명성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때 로비를 통해서 한미 FTA를 조기에 통과시키겠다, 뭔가 근본적인 우리 측의 접근 발상이 조금 어긋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데 이 로비스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로비스트를 쓰는 것보다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이나 이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로비스트들이 나서서 미국 의회 의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한미무역협정이라든가 혹은 쌍무 간의 관계를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자료를 수집해 주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다 하는 것을 분석해 주는 것이 더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운태 의원** 그렇지요. 그런 정도는 필요하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강운태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직접 이 계약서 원본을 가져왔거든요. 봤더니 4항을 보면 로비라는 말이 직접 나와요. 그것도 민주당 국회의원 또 행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를 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더구나 현재 미국 조야의 흐름을 보면 한 미 FTA에 관한 한 우리 정부의 희망과는 정반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지 않 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반대라기보다는 미국이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경제 위기 때문에, 한미 무역협정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미국 정부가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침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장관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문제는 아마 외무장관 회의에서 거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운태 의원** 우선 행정부를 대표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 정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특히 노조의 지원을 많 이 받았기 때문에,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자동 차 회사가 있는 지역에 가서 자동차 부분에 대해 서 한미 무역협정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은 있습 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강운태 의원 또 미국 의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 7870억 달러짜리 경기부양 법안을 확정하면서 이 재원이 투자되는 공적 사업에는 미국산 철강과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소위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을 넣었던 말이지요.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G20 정상회의가 4월 2일 런던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나올 테지만, 지난해 11월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 때도 나왔는데, 우리가 30년대 대공황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각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모든 나라가 경제에타격을 받으니 과거와 같은 일은 하지 말자, 당시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법안이 스무트-홀리 액트(Smoot-Hawley Act)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분위기는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7 재무장관회의가 로마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미국의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와서 '보호주의를 배격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미국 의회가 이와 같은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우여곡절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아주 보호주의적인 그와 같은 방향으로 미국 정 부가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들은 조심을 해야 하 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운태 의원 또 며칠 전 2월 5일입니다마는 미국의 345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부시의 자유무역협정이 결함을 가지고 있다'이렇게 지적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우리가 파나마라든 가 특히 콜롬비아는 우리보다 먼저 의회에 제시되었던 법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규모로 봐서 한국과 미국과의 자유무역은 그 규모가 미국이 NAFTA를 만든 이후에 가장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주는 경제적인 효과라고 할까하는 것은 이 두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이 끼어 있는 것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미국 무역 위원회에서 발표한 것과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양국이 굉장히 많은 이득을, 무역이나 성장 면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시키면서, 또 이것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더 단단히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건 조성에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미국 정부와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의회에서 이것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운태 의원 이렇게 보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민적인 합의도 미흡하고, 더구나 상대방은 행 정부, 의회, 시민단체 어느 곳도 서두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만 처리하면 결국은 명분도 잃 고 실익도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저는 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봐요.

지금 총리께서는 FTA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을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지 현행 법규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손해가 나는지 하는 것보다는……

○강운태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무총리 한승수 농축수산부, 수산 쪽 분야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적지 않은 손실이 있 으니까 그것을 위한 보전정책은 정부로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운태 의원 현행법에는 제조업은 25%, 농업 분야는 20% 이상 피해를 보았을 때 피해액의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보상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잘못된 것, 미흡한 것부터 고치고 그리고 미국의회가 심의에 들어가면 우리도 심의에 착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기 본적 사명임에 틀림이 없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습니다.

○**강운태 의원** 1990년 독일 통일을 바라보면서 총리께서 가장 큰 교훈이랄까, 그때 뭘 느끼셨습 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통일은 계획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오는 구나' 하는 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통일된 뒤에 동독과 서독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게, 그 이후에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 다' 하는 정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적지 않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강운태 의원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동독이 서독에 강제 흡수 당한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서독과의 통일을 결정했다는 것, 또 하나는 독일이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소·영·불 등주변 강대국의 동의를 얻어냈다는 것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만약 북한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처럼 투표를 한다면 우리 남쪽과 합하는 것을 희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부 걱정처럼 연변자치주처럼 중국으로 편입하는 것을 희망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굉장히 가정적인 질 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하 는 생각이 듭니다.

○**강운태 의원** 역사에 가정은 물론 없다고 합니다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통일하는데 주변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 으로 주변국에서 협조하리라고 보십니까? 이 점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여러 가지 가설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마는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데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운태 의원 비록 사견입니다마는 2년여 전에 제가 고르바초프를 만났는데요. 고르비의 판단은 주변 4대국 모두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고 특히 중국과 일본은 강하게 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피력하면서 자칫 한반도가 영구 분단국가로 갈 개연,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하는 걱정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통일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북한 주민과의 동질성을 튼튼하게 쌓아 가는 것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주변국들이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고르바초프 전 러시 아 대통령 혹은 총서기의 얘기를 저는 직접 못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는 공식적으로 주변국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운태 의원 어쨌든 좋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또한 남북 간에 동질성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운태 의원 어쨌든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는 고르바초프하고 사석에서 오랜 대화를 했는 데 그런 견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요.

북한 주민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시급한 것이 바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옥수수 5만t은 끝내 자존심 싸움 때문에 주지 못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자존심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로서는 항상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게 인도적인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북한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 북한 측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은 결과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강운태 의원** 금년 예산에도 쌀 40만t, 비료 30만t 줄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운태 의원** 이번에도 북한이 달라고 요청해 야 줄 것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대북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의 하나는 일관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언제든지 이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문제까지도 깊이 있는 이와 같은 토의와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운태 의원 세계식량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봄에 사상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번에는 차라리 우리가 먼저 북측에 무조건 주겠다고 제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작년에 아시다시피 호황, 우리나라에 태풍도 오지 않고 해서 작황이 참 좋았습니다, 남북한 모두. 그래서 우리로서는 북한의국민들이 모두 충분한 식량의 보급을 받아 가지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운태 의원 인도적 사업을 튼튼하게 하면 나 머지 경협과 정치적·군사적인 문제도 자연스럽 게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강운태 의원 따라서 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매년 GDP의 0.25% 가량씩 지원하는 특별법, 가칭 북한 동포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식량과 비료, 의약품, 교육 기자재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그 대북지원 문제는 남북 관계 상황이라든가 우리의 재정여건,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남북 간 협의를 전제하지 않고 일률적 으로 대북지원의 내용이나 규모나 시기를 법제화 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 을 합니다.

○강운태 의원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절대 절명의 지상 과제를 가슴에 안고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때 6자회담이 순항할 때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되면 유럽안보회의처럼 6자회담을 동북아안보 협력체로 발전시키자는 그런 제안들이 더러 있었 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아직도 지역안보협력체제로 이것을 발전시키자 하는 얘기들은 오가고 있습니 다.

○강운태 의원 그런데 동북아에는 군사적 문제외에도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황사 등 환경 문제,수많은 과제들이 얽히고설켜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비군사 분야에서 동북아 공동의 이해・관심・갈등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또 중국과 일본에 제안해서 한・중・일 3개국이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가칭 동북아평화번영회의체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이 문제는 대통령실의 어떤 직속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저는 이미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에 대통령께서 일 본에 가셔 가지고 한・중・일정상회담을 했습니 다. 원자바오・아소총리가 모여서 후쿠오카에서 3자가 회담을 했는데 12월 15일인가요? 아직까지 한・중・일 정상들은 APEC이라든지 아세안이라 든가 이와 같은 국제회의가 있을 때 만나서 3자 회담을 했지만 그런 국제회의 없이 단독으로 세 분이 만난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 의의가 있는 모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매년 한 번씩 돌아가면서 3국이 정상회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체가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동북아지역의 평화나 안정을 기하는 데 굉장히 좋은 이와 같은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1945년에 제2차 대전이끝나고 나서 EC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길게봐서는 동북아 지역의 공동체 형성의 첫발을 디딘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강운태 의원 특히 대륙붕 문제 같은 것은 심 각하다는 말이지요.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 주시 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장관께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강운태 의원** 미국도 경고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이 그런 저희들의 경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 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운태 의원** 우리 장관께서는 북한이 발사하 리라고 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현재로서는 예 단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운태 의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경고 방법 이외에, 예컨대 군사적으로 발사 기지를 선제 타격한다랄지 다른 대응수단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고려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운태 의원 아침 보도 보셨지요? 북한은 벌써 '이것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위성이다. 우주에 대한 개발하는 데 뭔 시비냐?' 벌써 발표했단 말이지요. 만약에 인공위성이라고 빠져 나가면 유엔 제재에서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1998년 8월 에 대포동 1호 발사했을 때도 북한은 그것을 인 공위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미사일하고 인공위성은 기본원리가 같습

니다. 탄두만 다르기 때문에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그것은 다 유엔 제재, 안보리 결의 1718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운태 의원 최근 미국 조야에서 북한을 핵보 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과 기록들이 공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말 이지요. 한마디로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손바닥으 로 하늘을 가린다고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그것은 개념의 혼동이 생기셔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핵을 갖고 있다는 것하고 그럼으로써 핵보유국이 되는가 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문제를 가지고 개념상 혼동이 있는데 만약 북한이 설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자동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점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운태 의원 물론이지요. 그래서 저도 미국이 북한을 국제법상의 공식적인 핵보유국가로 인정 한 바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겠지만 인도나 파키 스탄처럼 적어도 안보 측면에서는 핵무기 보유국 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정부가 너무 둔감한 것 같단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 우방국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운태 의원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미 양자회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환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북대화가 정상화될 때까지기다려 달라 이런 자세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핵무기 개발계획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도적인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미・북 접촉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운태 의원 하나의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시간문제이지 6 자회담보다는 북·미 양자회담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갈 가능성이 많고요.

또 바로 거기에서 비핵화보다는, 우리가 원하

는 비핵화보다는 비확산이 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나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그러한 우려가 학계를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운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남은 시간 이용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국정 패턴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물위에 뜬 기름처럼 욕속부달(欲速不達), 용두사미의 정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이라도 역지사지하는 마음 으로 국정의 스타일을 바꾸고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하면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드리면서 내각의 분발을 거듭 촉구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9월,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구제법안을 처리할 때 의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부시가 직접 나서 대폭 타협하고 보완해서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서 가까스로 통과시켰지 않았습니까? GM사를 비롯한 소위 빅3 자동차회사에 대한 구제 법안은 끝내 상원에서 부결시켰지 않았습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8250억 달러의 야심 찬 계획을 의회에 냈지만 의회에서는 닥지닥지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백악관에 넘겼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만든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뒷받침하는 통법부가 아니라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는 것이 입법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는 것이며 역사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절차만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업으로 따지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

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2월 임시국회가 통법부가 아닌 입법부로서 새로운 위상을 세우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강운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성회 의원님 소개로 경기도 화성시갑 지역구민 일흔여섯 분이 국회를 찾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은 꽉 찼습니다.

우리 본회의장 동료 의원들의 좌석은 많이 비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쪽이 많이 비었습니다.

다음은 김성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會 議員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화성갑 출신 김성회 의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보와 경제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때 문에 국가 안보가 등한시되거나 안보만을 위해서 경제가 희생되어서는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 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보와 경제라는 튼튼한 두 개의 수레바퀴 위에 국민의 신뢰를 실어서 미래로 전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15년간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한 논란의 책임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막고 군과 정부정책의 신뢰를 저하시킨 공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공군이 동편활주로 각도를 3도 조정하고 안전장비를 보강한다는 현실적 인 대안을 마련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의 핵심은 제2롯데월드 건축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법적 근거가 있느냐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94년 7월에 서울시가 공군에게 건축 가능성 여부를 질의했을 때 공군은 비행안전구역 밖은 항공기지법상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회신을 했습니

다.

장관님, 최초부터 공군이 제2롯데월드 건축을 반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군용항공기지법이나 또 현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군이 그동안 공군의 의견을 제시한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안전 및 안보 요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공군이 의견을 제시하였던 겁니 다

○金成會 議員 장관님 말씀처럼 당시의 항공기 지법상으로는 건축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에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보호법으로 건축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金成會 議員 장관께서 앞서 국제기준을 고려해서 고도제한 높이를 규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 12월에 전경련이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마이클 밀데 전 ICAO 법률국장은 제2롯데월드 건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혹시 아십니까? 말한 내용을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제가 참가하지도 않았고 또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〇金成會 議員 제가 알기로는 마이클 밀데 전 ICAO 국장은 제2롯데월드의 건설은 ICAO의 기준과 한국 내의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입니다.

이처럼 국내법은 물론이고 국제기구의 기준으로도 건축을 불허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군이 지난 15년간 입장을 수시로 바 꾼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의 영상자료를 보시면, 롯데와 공군 간의 진행 경과를 간략히 요약한 도표입니다. 저 도표 를 보면 공군이 수시로 입장을 바꾼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롯데가 건축에 착수하자 공군은 96년 7월에 미연방항공청의 ILS 기준을 근거로해서 164.5m까

지 건축을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롯데는 2002년 4월에 공군이 ILS의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군과 롯데는 실무회의를 열어서 건축고도를 315m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검토했는데, 장관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최초에 94년에 롯데에서 협의를 할 때는 555m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공군이 그것보다 낮은 높이를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또 315m까지 검토한 바도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會 議員 이게 상부에서 결정된 얘기가 아니고 실무선에서는 315m까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마 그렇다면 그것이 공 군이나 국방부에 정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金成會 議員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후에 2개월이 지나고 지난 2002년 6월에는 또 ILS 기준이 대폭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공군이 새롭게 ASR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또 203m로 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ASR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또 왜 제시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203m를 제시할 때 말씀하 신 대로 2002년에 FAA 기준이 변경되어서 다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축소된 기준에 의하여 정밀접근절차는 범위를 벗어나고 다만 비정밀접근절차의 범위내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203m를 검토한 것입니다.

○金成會 議員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공군이 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혹시 서울공항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우려가 있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그런지 계속 입장을 번복해서 그것을 피해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과거에는 순수 비행절차로서 검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행절차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공군은 203m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했고 그것도 비정밀접근절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밀접근절차는 그때도 해당이 없다고 공군이 결론을 낸 겁니다.

○金成會 議員 좋습니다.

다음은 항공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의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의하면 2003년 8월에 공군이 항공안전 본부에 의뢰를 해서 항공안전본부는 미국의 FAA 에 의뢰를 해서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 년 10월에는 국내 연구기관에서 비행안전영향평 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계시죠?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 ○金成會 議員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때는 그 지역이 비정밀 접근절차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FAA에서 공군에 비정밀접근절차를 변경하라는 개선권고를 한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개선으로는 비행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〇金成會 議員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03년 과 2006년에 이미 비행절차를 다소 조정하면 비 행안전에 지장이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대안 이 이미 제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군이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않 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시설과 장비를 그냥 둔 상태에서 비행절차만 변경해서는 우리 공군이 갖고 있는 절차예규에 충족하지 못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만일 지금도 시설과 장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다면 공군은 똑같은 결론을 낼 겁니다.

- ○金成會 議員 그렇다면 당시에도 이번 2009년 1월 실무회의 권고안처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롯데가 비용을 부담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건축이 가능했을까요, 그때 당시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때도 아마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제공하고 비행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시설과 장비에 대한 부담을 한다는 그러 한 전제가 있었다면 공군의 결론이 달라졌을 겁 니다.
- ○金成會 議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실시한 충돌위험모델 시

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제가 그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 ○金成會 議員 어떻게 나왔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밀계기 접근 절차상에서는 1000조분의 1 이하, 그다음에 FAA 기준에 의한 정밀계기 접근 절차에는 1000만분의 1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金成會 議員 이 시험 결과 충돌 확률은 1000 조분의 1이고 미국의 FAA(항공안전청)가 안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준은 1000만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FAA 안전 기준보다 1000만 배 이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전경련이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로버트 번스 전 미 FAA 전 문요원은 제2롯데월드 건설에 대해 어떠한 의견 을 밝혔는지 혹시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컨퍼런스 결과에 관해서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 ○金成會 議員 거기에서 로버트 번스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에게 승인 권한이 있다면 —이 사람이 옛날에 안전과 관련된 FAA 전문요 원입니다—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 원회는 동편 활주로의 방향을 3도 조정하는 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안은 물론 미 FAA가 요구 하는 규정과 절차에 적합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〇金成會 議員 그리고 항공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우리의 공군 비행안전예규 에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金成會 議員 그리고 최근에 제2롯데월드 신축 부지가 미국의 기준인 FAA 제7구역에 포함되므 로 허가가 불가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 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제7구역까지 안전 구역을 확대할 경우에 고도제한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52.4m가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건 물이 서울공항 주변 지역에 9개나 됩니다. 거기 에 보면 무역센터를 포함해서 9개의 건물이 있습 니다. 만약에 반대론자의 주장대로라면 기존의 무역센터를 비롯한 9개의 건물도 모두 철거를 해 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또 23개의 자연 장애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FAA 기준에 있어서의 제 7구역은 우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 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金成會 議員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金成會 議員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억지라는 말씀이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 ○金成會 議員 그러니까 무역센터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것 아니 겠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성남기지의 어떤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金成會 議員 작년 12월에 국방위에서 장관께서 공군참모총장과 함께 "롯데월드가 신축이 되더라도 공군의 작전 임무 수행과 항공기 비행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것이지 8.2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 니까 제2롯데월드의 위치는 첫째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저촉되는 위치가 아니고, 두 번째 비행 절차상의 문제, 비행 안전의 문제는 저희 공군의 안전예규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비행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金成會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2롯데 월드 건립에 대해서 공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3년부터 제2롯데월드 건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코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국에 산재한 군사 시설로 인해 수십 년 동안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침해를 받아 왔습니다. 서울공항 인근의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문제와 남한강 상수원

의 오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여주 공군사격 장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제2롯데월드 건축을 계기로 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의 적용을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장관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은 경계 기능을 상실한 철책선을 제 거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을 서 왔 습니다. 대단히,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경기도 관내 서해안의 철책선은 시흥과 안산 지역은 이미 철거가 완료가 되었고 평택은 금년 중으로 철거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성 지역에만 48km의 철책선이 남게 됩니다.

올해 국방부가 한강 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에 국비 45억 원을 지원한 것처럼 2010년에도 국방 부에서 화성의 철책선 제거를 위한 예산을 편성 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 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철책선 제거와 관련해서는 국방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는 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한강 하구도 그 예산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조치해 주셔 서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 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도 국방부의 원칙은 지키면 서 또 국비가 보조될 수 있는지 지원 여부는 앞 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成會 議員**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 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주요 현안마다 미국과 충돌을 해서 50년 혈맹 관계였던 한미 동맹 체제 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4월과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 중심의 군사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21세기 전략 동맹 관계로 격상을 시켰고 약화된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2008년 중에 한미 양정상은 네 차례의 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에 신뢰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또 21세기 전략 동맹의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국 간 그런 강화된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2008년 중 한미 관계에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주한미군을 현 수준,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미국산 무기·군사장비구매, FMS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NATO+3 수준으로 지위를 격상을 했고, 그 외에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 또 한미 간의 환율 안정을 위한 통화 스와프,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도입 등 다양한 그런 합의, 실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리고 우리 정부는 미국 오바마 정부와의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전략적 한미동맹 강화 방안이 무엇이며, 동맹 미래비전 선언에 포함시킬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21세기 안보 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 동맹관계로 일단 격상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하나의 전략적인 그런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우리가 한미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군사적인 동맹관계에서 앞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부문으로 동맹의 영역(scope)를 확대해나가야 되겠다, 또 세 번째는 지역적인 안보를위한 협력뿐만 아니고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미 간에 이해를 같이하고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인 역량, 소위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그런 데 우리가 도움이 될 것으로생각되고, 그런 내용을 취합해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金成會 議員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이 되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60년 혈맹의 역사적 기록을 유지하고, 전후세대에게 한국전쟁의 실상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가칭 '한미동맹 기념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기념관은 별도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로 쓰이는 건물과 미8군사령부건물 등을 존치해서 기념관으로 활용하자는 견해입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김성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동맹은 지난 50여 년간 동북 아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유지에 중대한 역할 을 수행해 왔고, 지금은 한미전략동맹을 추진 중 에 있습니다.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용산 공원조성추진위원회 등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成會 議員 그리고 지난 2월 2일에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 소재 매향리 사격장은 지난 53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했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미 공군의 사격장이었던 매향리에서 오폭과 불발탄 사고 등으로 11명이 사망을 했고, 8명이 부상당하는 등 19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국비로 1조 5000억을 지원하고, 80만 평이나 되는 땅을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 인명 손실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했던 화성시 매향리 주민들에게는 토지매입비 1167억 원 중 고작 36%인 425억 원만을 국비로 지원하고, 매향리 평화 공원조성사업비 851억 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공평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서울 용산공원조성사업 비는 종합기본계획 수립 후에 공원 조성 방향이 결정되어야만 산출이 가능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비의 분담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까지 재원의 분담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소재 매향리 사격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반환기지 활용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업성격상 사실은 용산공원조성사업과 비교가 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차질이 있지 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〇金成會 議員 그렇지만 총리께서 지난번에…… 그 문제는 총리 산하에 있던 기구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데 관 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 ○金成會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 원 여러분!

국력은 안보와 경제, 그리고 애국심의 결집으로 나타납니다. 안보는 튼튼한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경제는 국방력이라는 든든한 보호막이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애국심이 없다면 안보와 경제도 곧바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세계 정세 의 혼란과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 습니다.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개의 튼튼한 수레바퀴 위에 국민의 신뢰를 더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국 정철학인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국민과 군이 하나 되고, 안보와 경제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 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김성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의원 최영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금년에만 28조 5000억 원을 국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60만 명의 젊은이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전후방에서 군복무를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백성이 굶는다고아우성을 쳐도 무기 도입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국민이 왜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있습니까?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상상황 때문에 그 고통을 참고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방부와 공군의 일부가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습니다. 제2롯 데월드 사건은 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 온 국 민들을 조롱한 대한민국의 구멍 난 안보의 상징 이며, 안보도 사유화한 부도덕한 국정 운영을 적 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방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군사행동에 대비해서 우리 군은 이를 100% 저지하고 또 군사적으로 앞설 태세가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최영희 의원 북의 군사행동 시 대응계획에 우리 군의 군사경계선 이북지역에 대한 공격도 포함돼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군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계획에 관해서는 제가 공개적인 상황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최영희 의원 그러면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이 남북 경계선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격퇴하고, 또 경계선 이북으로 몰아내는 것 이 북에 대한 응징이지요? 당연하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최영희 의원 그런데 북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고 북쪽 기지에서 함포사격을 하거나 장사정포를 이용해서 남쪽에 포격을 가한다거나 이럴 때는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도 가능성 있는 북한 의 도발 양상 중의 하나입니다.
- ○최영희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훈련 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희 의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최영희 의원 예.

남과 북의 화해무드가 조성 중일 때는 우리가 과감한 군사행동도 가능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 될 때는 부분적 조치도 불가능했었지요, 과거에 보면요? 이해하십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무슨 조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최영희 의원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는 부분적인 조치조차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2002년 2차 연평해전에서는 우리가 군력으로 응징을 하고 핫라인을 통해서 북 수뇌부에게 따졌고, 또 하급 단위지만 책임을 지면서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말의 푸에 블로호나 김신조, 또 70년대 중반의 도끼만행사 건 이럴 때는 우리 군사작전을 펴지 못했거든요. 대화가 단절됐을 때는 바로 이런 경우가 나타났었다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닙니다.
- ○최영희 의원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 ○최영희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은 남북 관계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들이 원한다면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99년에도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였고, 또 06년에도 장거리 발사,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다가 실패를 하였고……
- ○최영희 의원 시험을 한 것하고 우리한테 공격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1·2차 연평해전도 다 99 년, 또 02년에 발생을 하고······
- ○최영희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응징을 했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06년에는 핵 장치에 대한 시험까지 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그들이 원한다 면, 또 그들이 편리한 시기에 항상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희 의원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발했을 경우에 우리가 응징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겁니다. 대화에 핫라인이 있 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응징을 할 수가 있는데, 하고도 사과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못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전면전을 일으켜 북을 군사적으로 완전 섬멸하겠다는 것은 분명 아니죠?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 ○최영희 의원 국지적인 도발행위에 대해서 응 징하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대비태세죠?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최영희 의원 이처럼 군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 는 일종의 저강도 전쟁 국면인데 저강도 전략의 기본은 대화와 안보의 병행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최영희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관 님께서 대통령께도 강력히 대화가 필요하다는 부

분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해 2월 인사청문회에서 제2롯 데월드 건립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죠?

-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는 비행 절차만을 변경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 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 ○최영희 의원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이 08년 8월경에 국방부에 제출한 네 가지 방안, '서울기지 운영방안 검토 보고서'여기는 허가하자는 입장이었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똑바로 들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 ○최영희 의원 제가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있었죠?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영상자료를 보며)

- ○최영희 의원 이분이 8월경에 국방부에 제출한 네 가지 방안에 '서울기지 운영방안 검토' 보고서 있었죠?
- ○국방부장관 이상희 있었습니다.
- ○최영희 의원 거기서는 허가하면 안 된다는 입 장이었죠?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기 총장이 보고한 네 가지 보고서는 그러한 네 가지 방안이 다, 시설과 또는 장비를 보강한다면 공군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방안이었습니다.
- ○최영희 의원 제가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1월 12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활주로는 3도를 변경하고 항행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모 장비를 보강한다면 건설해도 좋다. 이렇게 하셨죠?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최영희 의원 그런데 항공기와 롯데월드에 설 치하는 안전장비라는 것이 자동으로 항공기가 충 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근본적으로 3도의 활주로 방향을 전환하면 기본적인 안전에는 문제 가 없으나 그러한 장비는 추가적으로 이중 삼중 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 ○최영희 의원 그래서 경고음을 내는 것을 장착 한다는 거죠?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최영희 의원** 경고음 내는 장치가 근본적인 안 전을 보장합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근본적인 안전은 활주로의 전환으로써 해결되는 것이고 그건 부수적인 안전 대책입니다.
- ○최영희 의원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군에서 내 놓은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 ○**최영희 의원** 여기에 보면 장관님의 사인까지 있습니다.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최영희 의원 서울기지 운영방안 검토 자료에 보면 3도를 변경할 경우 일부 전력은 분산 배치 하고 부지 매입과 시설을 신축해야 된다고 합니 다. 그렇죠?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최영희 의원 예, 또한 전력 분산으로 그만큼 서울공항의 전략적 임무는 거의 축소되는데 그 정도면 서울공항은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전력의 분산이라는 것은 더 확실한 안전을 위하여 일부 전력을 분산하는 것 또 저희가 12년에서 14년 사이에 이전하도록 돼 있는 KA-1 같은 것을 보다 더 조기에 분산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 ○최영희 의원 그리고 기동공간의 제한으로 에어쇼 개최도 가능할지 모르겠고 또 서쪽 방향 출항 경로가 일부 제한되므로 전시작전 시에는 공군항공기 운용전술에 심각한 제약 요건으로 된다, 이런 뜻인 것 맞죠?
- ○국방부장관 이상희 서울에어쇼 문제는 보다 더 정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대 개 에어쇼를 하려면 3nm정도의 기동 공역이 필요 합니다. 그러나 현재 활주로 중앙에서 롯데 건물 까지는 5n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는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영희 의원 주둔 미군과 협의를 해야 될 문 제도 발생하죠? 협의하셨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롯데와 말씀입니까?
- ○최영희 의원 지금 현재 성남기지에 있는 미군 들과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현재 성남기지에 있는 미 군 비행기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헬기부대가 있

고 또 경항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에 큰 문제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최영희 의원 지금 서울기지 운영방안 검토, 이 안에 문제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거 청와대하고 대통령께 보고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실무 차원에서만 토의가 되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보고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보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영희 의원** 이것은 그때 8월 달에는 행정협 의회에도 올라가지도 않았을 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이전에 검토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월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민관합동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경련이 건의를 해요. 그 이후에 검토한 사항들입니다.

○최영희 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연말까지 롯데월드 문제를 해결하라.' 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연말까지'라는 시한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최영희 의원** 실제로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더라도 그 절차는 총 리실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영희 의원 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1안 2안 3안 4안 여기에 다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3도를 틀어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됨에 따라서 청와대의 미움을 산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이 9월에 경질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기 총장의 교체는 공군의 인력 순환에 따라서 교체가 된 것이고, 그 4개 안 자체가 전부 가능한 방향으로 김은기 총장이 보고를 했고 그 후임 총장이 그에 준해서 방책을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희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김은기 총장이 9월 17일 날 임기를 7개월 남기고 경질됐습니다. 그런데 인사 적체 때문에 그랬다면, 제2 롯데월드 이 부분과 관계없다고 하는데 혹시 역대 공군참모총장 중에 2년 임기를 채운 분들은 거의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부분적으로 2년을 채운 사람도 있고 또 1년 반 정도에서 임기가 종료된 사람도 있고 그 이전에 종료된 사람도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1989년도 3월 군인사법 제19조 개정으로 2년 임기제가 보장된 후에 20대 공군참모총장부터 29 대 총장까지 살펴보면 모두 임기를 채우거나 영 전했거나 사고에 대한 잘못으로 경질됐습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30대 김은기 총장이 가장 짧은 1년 5개월 만에 경질됐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 고 보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3도만 변경하면 100% 안전합니까? 공군보고서 이 안에 보면 "동·서 활주로를 10도를 동시에 틀어도 에어쇼가 어렵고 의도적 비의도적 충돌 가능성을 내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3도 변경안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하여 법적인 측면의 검토와 두 번째로 과학기술에 근거를 둔 비행안전 절차에 대한 검토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공군 또는 국방부 의견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최영희 의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직접 조정을 해 온 사람들이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고 또 전문 가들도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이라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안전비행 장애요소를 찾아내서 직접 제거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저희가 공군에서 검토한…… ○최영희 의원 이걸 지금 법적 과학적으로만 얘 기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우선 법적 과학적 검토에 의하여 공군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최영희 의원 "만약에 롯데월드가 지금 여기 있고 새롭게 성남기지에다가 비행장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겠느냐?"라고 했더니 국방부에서 직 접 국회에 나와서 "10도 각도를 틀겠다. 동·서 활주로를 모두 10도 각도를 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도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도 각도를 틀겠다는 것은 기존의 군사보호구역 또는 고도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벌판이라면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성남시라는 큰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추가적인 규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3도 변경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최영희 의원 제가 이 공군본부에서 나온 걸 보면 3도 변경을 했을 경우에 여기 이렇게 제한 사항들이 주르륵 나와 있습니다. 기동 공간 제한 으로 에어쇼 개최 가능 여부 모호, 의도적·비의 도적 충돌 가능성 증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마이뉴 스에서 국방부에다 문제를 제기했더니 국방부에 서 하는 말이 이 서류는 중간에 검토한 중간검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해양부하고 함께 정밀 검토를 해서 장비가 보완되면 안전성 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8월 보고서는 중간검토 단계에서 작성 된 것이라고 했는데 중간검토보고서에 장관이 사 인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을 속이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장관은 중간보고도 받고 결과보고도 받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 사이에 더 추가적인 보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그러면 왜 결과보고서는 안 줍니까?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줬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결과보고……

○최영희 의원 이것은 제가 공군에다 부탁해 가지고 공군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보내 준 겁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결과보고서를 줘야되는데 이것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지않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결과보고서는 행정협의조 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결과보고서입니다.

○최영희 의원 그건 이걸 수정해서 가능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바꿔 냈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러니까 그건 중간보고입니다.

○최영희 의원 바로 김은기 총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일사천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금년 2월 2일자 조선일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람도 문제고 전시에는 다양한 전투기 집결, 조종사의 심리적 부담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처럼 직접 조종을 한 공군 측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국방부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재벌의 욕심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꿔야 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말씀하신 바람과 관련해서도 저도 그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와류나 난류의 문제는 그것이 현재 비행선과 대개 1.9㎞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공군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것이 있더라도 대개 그 지역을 1초~2초면 통과하기 때문에 큰영향은 없다고 하나 그 연구하신 분이 충분한 데이터 없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공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기존 자료와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사천비행장 조종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높은 사람들 이해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유선진당의 이진삼 의원이 직접 물은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조종사들이 충분히 현재 성남비행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감각적으로 답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의원** 비행장은 전시 상황을 생각해서 한다 그랬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최영희 의원 에어쇼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 도면, 전시 상황에 비행기가 어떻게 뜨고 내리는 지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에어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3nm의 기동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지를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시에도 저희가 전시의 스크램블이나 기 타 상황들을 다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고려해서 판단하신 거라고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최영희 의원 555m의 롯데월드에 비행기가 충돌하면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제가 판단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영희 의원 앞으로 그런 건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야 되겠지요? 2006년도에 시뮬레이션을 했다 고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때 시뮬레이션한 것은 비행 절차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최영희 의원 그런데 그 자료는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자료가 사라졌는지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영희 의원 제2롯데월드가 건설된 후에 민원 이 들어올 겁니다, 기지 이전하라고. 그것 때문에 수원 대구 광주…… 전국의 도심 공항기지 어떻 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저희도 우려되는 바이나 제2롯데월드와 관련하여 성남기지는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건설되더라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다만 다른 비행장을 포함하여 군용 항공기지에 대한 고도의 제한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정밀 검토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완화 대책이 강구된다면 그건 추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저는 국가안보를 책임진 장관이어찌 보면 부하를 희생양으로 혹시 삼거나 또 국가안보에 구멍을 내면서까지 한 재벌 회장의 집념을 허가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군을 신뢰할 수 없을지 도 모릅니다. 떠나야 할 사람은 저는 군인으로서 정직하게 '노'라고 말한 김은기 참모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안보 전선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국방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사태를 이렇게 몰고 온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퇴할 용의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장관 은 하시라도 통수권자에게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최영희 의원 군 후배들의 명예를 위해서 결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은 이행 의무가 없는 MOU와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관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6·15 선언하고 10·4 선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 간에 남북관계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또 향후 협력 사업의 추진 의향을 담은 정치적 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의원** 그래서 이 이행 방안이 없으면 MOU에 불과한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국회에서 무슨 비준을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문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행에 관한 남북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어떤 대외관계 문서에서 최고지 도자 합의서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시시콜콜 담 고 있는 것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외문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지난해 우리 정부가 이 두 가지 선언 이행을 위해서 대화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 을 협의하기 위해서 북에 제의한 적 없으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닙니다. 여러 번 저희들 이 제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언제 여러 번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통령께서도 지난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 9월에 평통지역협의회 회의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 장관도 지난해 여러 번 그 점에 대해서 대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의했다는 것은 두 차례 제의한 것인데요, "옥수수 5만t 제 공에 대해서 만나서 협의해 보자." 이런 식의 제 의였지 두 선언 이행에 대한 대화 제의는 아니었 습니다. 명확히 하십시오.

또 장관은 취임식에서 모든 방식의 대화, 어떤

급의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의제로라도 대화를 하자고 제의했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내놓기바랍니다.

지금 특히 2차 총리급 회담을 당장 제의해야합니다. 남과 북 사이에 현재 합의된 대화 일정으로 살아 있는 유일한 약속은 제2차 총리급 회담입니다.

6·15 그리고 10·4 선언 이행과 관련해서 이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남북 모두의 의무이고 다른 한쪽이 이를 거절한다면 거절한 쪽이 이 두가지 선언을 무시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장관이 이를 즉각 북에 제의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취임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대화하겠다고 제의를 했고, 북한이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에 나와서 남북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최영희 의원 어떤 분이 항상 제의한다고 하면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오래간만에 사람 만나면 '어, 나중에 우리 밥 한번 먹어.' 이런 식으로 제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럽니다. 수첩 딱꺼내놓고 언제 어떻게 보자, 구체적으로 하시기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북의 군사 행동으로 우리 군이 100% 군사적 승리를 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00% 승 리했다고 하더라도 크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합니다마는, 하여튼 군사적인 긴장 고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최영희 의원 주식시장에서는 남북 문제로 인해 기업 가치가 10% 낮게 평가되는 그런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있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30%까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최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구 결과는 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 여튼 남북 간에 군사적인 충돌이 있다고 하는 것 은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의원 2003년 북핵 위기 때도 무디스가 2단계나 신용등급을 낮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아지면 직접 피해만 7000억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위기에는 심각한 타격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8일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다"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일부 언론에 그러한보도가 났었지만 청와대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대화를 촉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 질문에서 청와대 여론 조작 지침에 대해서 총리께서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원본메일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무실장을 통해서, 제가 그 긴급현안은 11일 질문을 받았고 그래서 알아보았 습니다, 메일.

○최영희 의원 메일을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메일은 보지를 않았습니다.

○최영희 의원 언제 보냈다고 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희가 알기에는 2월 3일 오 전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확실하게 확인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총리실의 정무실장을 통해서 청와대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청와대가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 서 홍보 지침을 보냈다는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무슨…… 여론이요?

○최영희 의원 이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은, 홍 보 지침 보냈다는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 그날 김유정 의원의 대 정부질문 때 처음 알았습니다.

○최영희 의원 경찰청과 국정원이 6일 김유정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대정부질문 할 거냐"라고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총리실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보고받은 것 없습니다. ○최영희 의원 청와대는 11일 이전에, 김유정 의원이 11일 얘기하기 이전에 세 차례나 행정관 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총리께 안 알 려 주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총리는 청와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일을 일일이 다 보고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최영희 의원 저는 이런 것쯤은 당연하게 총리 께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 그 메일을 받아서 경기도경찰청에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사실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 입니다. 이것은 저희 내각하고 거의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 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최영희 의원** 이 사람들은, 정부 부처나 이런 경찰청은 다 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총리 산하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받는 이메일이나 편지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총리실에 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최영희 의원 저는 이렇게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향할 때마다 사용해 온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즐겨 써 먹던 아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세 총리라는 말을 들으시려면 청와대와 소통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라면 정부 부처 누가 총리 지시 사항을 따르겠습니까? 청와대는 만약을 위해 개인 메일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청은 구두로 경기 경찰청에 연락하는 등 끝까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총리님, 이렇게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 점을 볼 때 이는 강호순처럼 정말 치밀한 사전 계획 속에서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되었는지 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였는지 또 다른 여론 조작 행위는 없었는지 모두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감사원에 감사 요청하실 생각은 없

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청와 대 행정관이 본인의 공식적인 업무와 사실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고, 관련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일단락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국민들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 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총리실이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홍보 담당 부서에 대해서 감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이 문제를 가지고 감 찰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항상 정부로서는 내각 의 모든 부서들이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이 렇게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들어가십시오.

축소, 은폐,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정부는 일부의 '사실'은 확인하겠지만 절대로 '진실'은 스스로 밝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국정조 사를 실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최영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상희 의원님 소개로 한국청년연합회 소속 대학생 마흔세 분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옥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議員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정옥임 의원입니다.

오늘 김정일 위원장 생일입니다. 이렇게 이름 붙은 날이 올 때마다 우리는 북한의 NLL 도발이 나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긴장합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그리고 4월에 죽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 한미 정상회담, 이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남북관계의 현 주소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정부 상태의 국제 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똑똑하고 단합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위 스마트 파워가 있어야 주변 4강 그리고 북한의 지정학적 굴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상 대가 무시 못 할 방위 충분성, 전략 동맹으로서 의 한미 동맹, 북한에 대한 정상적인 포용 그리고 국익 향상을 위한 대외 협상력, 이것이 바로 똑똑한 안보의 내용입니다.

과연 각 부처가 이 스마트 파워를 얼마나 잘 키워 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지금 NLL상에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다시 할 경우에 99년이나 2002년 같은 형태로 사태가 전개될 수도 있지만 해안 포 내지는 미사일 공격 가능성도 지금 상정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NLL에서 북한이 만일 또 다른 도발을 한다면 그것은 과거와 같은 양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기타 다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그러한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그러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전부 상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NLL 외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다른 지역, 예를 든다면 DMZ에서 국지 도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있습니다.
- ○鄭玉任 議員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국방부와 군은 서북해역뿐 아니라 DMZ를 비롯한 지상에서의 적의도발 또 항공기에 의한 공중 도발 또 해상에서의도발 또 요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등 여러 가지 도발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를 쓰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국민들께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정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은 작전 계획상의 문제고 전투 준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 니다.

○鄭玉任 議員 오늘 이 자리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이런 북한의 도발 가능성, 일촉즉발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99년과 2002년의 연평해전, 이게 당시 대북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대북 정책과 북한의 도발

은 저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 다

왜냐하면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소위 햇볕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그 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도발을 하였습니다. 98년의 미사일 발사, 99년도의 제1 연평해전 또 02년의 제2 연평해전, 06년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등 여러 가지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그들은 도발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鄭玉任 議員 장관께서 잘 설명을 하셨듯이 특히 2002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임동원 특보가 대통령 전용기까지 타고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5시간이나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북한을 의심하면 될 일도 안 된다"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연평해전 바로 한 달 전에는 김동신 국방장관이 "주적 개념을 땅에 묻겠다"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연평해전 일어났고 우리아까운 아들들 6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전규칙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2년의 연평해전을 보면, 지금 자료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훨씬 현대적인 무기체제를 갖 고도 비참하게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성 부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답변하십시오.

- ○국방부장관 이상희 교전규칙은 맞습니다.
- ○鄭玉任 議員 결국은 이 연평해전 때문에, 연평해전 직후에 교전규칙을 3단계로 축소를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바뀝니다. 경고통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서로 통신을 해서 무력화의도 여부를 사전에 참작한 다음에 실력 행사 여부를 판단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현재 3단계는 동일하 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鄭玉任 議員 오전의 답변에서 '현장 지휘관에 필요 권한을 위임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똑같게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경고통신 단계가 있어서 상대방의 무력 도발 의지를 확인한다음에야 우리가 조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고통신이라는 것은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북 합의에의하여 NLL을 침범하면 국제상선망에 의하여 넘지 말라는 경고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실제 군사적 대응하고는 그렇게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鄭玉任 議員 기동성 있게 조처를 하겠다라는 답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면전보다도 다양한 국지 도발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 러한 국지 도발을 방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 는 게 아니라 사전에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NLL 지역에서도 우리가 북한군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전력을 배치해서 대응을 하여 적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나 만일 억제 실패 시에는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鄭玉任 議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좌익을 추구하는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익을 추구하는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
- ○鄭玉任 議員 답변하십시오.
- ○국방부장관 이상희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좌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鄭玉任 議員 좌익을 추구하지 않고 좌익・우익 이념논쟁에 서 있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좌익도 우익도 아니고 국익을 추구하는 실용정부입니다. 맞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鄭玉任 議員 그렇다면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 같이 대비해서 국가의 영토 수호와 국민의 안전 을 보호하겠다라는 확신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 다.
-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겠습니다.
- ○鄭玉任 議員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도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진석 의원께서 질문하셨듯이 비핵 개방 3000

주역의 한 분이시지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 ○鄭玉任 議員 그런데 취임사를 보니까 비핵 개 방 3000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 다. 왜 그랬습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난 1년 우리 정부는 대 북정책의 용어를 상생과 공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취임사에서 정부 의 공식용어인 상생과 공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핵 개방 3000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러한 깊은 뜻에도 불구하고 쓰다가 안 쓰시면 모 언론에서 주장했듯이 '용어를 슬그머니 내렸다'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북한이 이런 비난을 하지요. '가장 악랄하고 반 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이고 반북대결적인 모략책 동, 괴뢰 통치배들이 동족을 해치겠다고 날뛰어 서 북남 사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북한 자주권을 침해했다', 이것 북한의 주장 맞지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것 같습니다.
- **○鄭玉任 議員** 이게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북한의 비난 맞습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것 같습니다.
- ○鄭玉任 議員 그런 것 같지요?

아닙니다. 1998년에서 2000년도까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난하면서 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부 좀 하십시오.

그리고요, 2007년 대통령선거 중에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공약을 세웠지만 당시 북한에서 아무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3월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지 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 ○鄭玉任 議員 북한이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또 야당에서 정치공세를 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밀리시면, 그런 배포로 이명박 정부의 정상적인 대북 포용정책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소신껏 밀어붙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鄭玉任 議員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과 언제든지 만날 용의 있

다', 이것은 취임사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여섯 차례나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면 이 대화에 대해서 '특사 파견하라' 심지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파견할 생각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로 개성공단을 보면 북한의 공세와는 대조적으로 개성공단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시지 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 ○鄭玉任 議員 지금 구체적으로 대화를 제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북한이 그 약 속대로 핵 폐기 절차를 밟으면 개성공단 2단계는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만큼······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정권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개성공단이 더 많이 활성화되었 고 북한 노동자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추상적인 대화 제의하지 마시고 '3통 문제 해결하자' 또 '개성공단의 기숙사 문제 해결하자', '바로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위 해서 대화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실 용의 없 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개성공단 확대 문 제든지 3통 문제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 이 대화를 해야 될 것이, 특히 지난번 12월 1일, 12·1 조치는 저희 기업들에게 지금 아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하게 풀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鄭玉任 議員 대화를 좀 구체적으로 제의하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이 생각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김정일 위원장에 관한 얘기는 적절치 않아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鄭玉任 議員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 는 존재는 북한 인민입니다.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기대하는 존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제 가······
- ○鄭玉任 議員 장관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하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바로 남조선 인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 정부의당시 남북관계에 깊숙이 관여했던 모 고위 인사가 북한의 고위 인사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북한 요인의 말을 전언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취임사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영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대북 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남 갈등입 니다. 아셨습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 ○鄭玉任 議員 들어가십시오.

외통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서 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 특별 협정 타결하셨지요?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했습니다.
- ○鄭玉任 議員 지난 정부 때의 협정하고 대비되는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일 중요한 것은, 방위비 분담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3년 내에 100% 현물로 제공하기로 합의를 한 게 가장중요한 내용입니다.
- ○鄭玉任 議員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현금 지원을 이제는 현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지요?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 ○鄭玉任 議員 지난 정권에서 단 한 번도 현물 로 하자고 미국이 제의한 적 있습니까?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실무선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鄭玉任 議員 공식적으로 제의해 갖고 문제를 타결한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 ○鄭玉任 議員 3단계로 나누어서요.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맞습니다.
- ○鄭玉任 議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왜 방위비 분담금을 LPP에 사용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맞지요?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 ○鄭玉任 議員 이게 언제부터 결정 난 것입니까? 즉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LPP에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알기로는 기지

이전 문제가 본격화된 2000년부터 그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2001년도에 미 측이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에 그런 설명을 해 왔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래서 제가 지금 근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가 근거 자료를 제시하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1년 2월에—김대중 정부 때—바로 NSC 상임위 회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게 지금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열람한 자료를 제 기억에 맞추어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참석자, 제목 나와 있고, 내용을 잘 보십 시오.

LPP 추진과 관련해서 대체부지 매입은 우리 측이, 시설자금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떡 하니 괄호 열고 '방위비 분담금 포함'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께서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LPP가 개정되지 않습니까? 평택 기지 이전으로요. 그렇지요?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2004년……
- ○鄭玉任 議員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났었습니까?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당시에도 그것을 재검토했습니다마는 방위비 분담금의 군사시설비 일부를 LPP 사업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이 난 것으로……
- ○鄭玉任 議員 그러니까 평택기지 이전에 관한 사업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난 것이 노무현 정부 때라는 말씀이시지요?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2004년으로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 ○鄭玉任 議員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것이…… 민노당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또 그 렇다 칩시다. 민노당의 당 강령은 주한 미군 철 수, 한미 동맹 폐지입니다.

그런데 통합민주당 또 열우당의 뿌리를 가지고 계시는 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왜 제기하 시는 겁니까? 이 방위비 분담금을 LPP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결정 난 것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 제 제기를 하십니까?

정부가 똑바로 설명 안 한 것 아닙니까?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도로 국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鄭玉任 議員 최대한도로 했는데 왜 그런 질문이 계속 나오고 또 마치 이명박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LPP에 전용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되는 겁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 ○鄭玉任 議員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시고요. 야 당 의원들께 친절하게 세밀하게 설명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사항은 국방부장관 소관입니다.
- ○鄭玉任 議員 국방부장관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은 외교부 소관입 니다.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압니다.
- ○鄭玉任 議員 물론 LPP에의 전용은 국방부 소 관이지만 지금 NSC 좌장으로서 그런 말씀하시 면 안 되지요. 책임 있게 말씀하십시오.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 ○鄭玉任 議員 지금 실수하신 겁니다.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 ○鄭玉任 議員 자, 한미 FTA에 대해서 질문하 겠습니다.

당시 위원장의 직권상정은 엄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여당 의원들이 점거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머와 전기톱이 등장해서 전 세계에 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의 5선 관록을 자랑하는 정치신사, 존경하는 박상천 의원께서 '이 깽판 국회바로잡기 위해서 상정 자체를 막지는 말자'이렇게 정말 고뇌 어린 제안을 하셨겠습니까?

현재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재협상'의 '재'자라도 꺼낸 적이 있습니까?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게 공식적으로 제 의한 바는 없습니다.
- ○鄭玉任 議員 저쪽에서 재협상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재협상 운운하면 미국이 전혀 할 생각이 없다가도 우리가 오히려 미국에게 말할 수 있는 빌미 주는 것 아닙니까?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정옥임 의원 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鄭玉任 議員 그렇다면 백 번을 양보해 가지고

야당이 주장하듯이 재협상을 받아들였다 칩시다,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미국이 다른 상품,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시장을 열어 준 농산품에 대해서 양보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가정법입 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鄭玉任 議員 지금 자기 나라의 경기 부양책 하면서 경기 부양책의 기자재는 'Made in USA', 미국제로만 하자는 게 지금 미국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와도 FTA 추 진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어떤 나라들하고 하고 있습니까? 경과 보고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인도하고는 지금 가서 명을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발효를 시킬 예정입 니다. 곧 우리 국회에도 보고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EU하고의 협상도 거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3월 하순에 마지막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서 협상을 종료시킴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하고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이렇게 여러 나라들하고 FTA를 하는데 미국이 혹시 재협상 요구할지 모른다고 그래 갖고 타결한 협정에 대해서 비준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선례를 만들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게도 빌미 잡히는 일이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바로 그 점입니다. ○鄭玉任 議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로 그렇 기 때문에 우리가 국익에 맞으면 우리 스스로 비 준을 하고 또 비준을 해야 농어촌에 대한 보완 대책에 지금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바로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리고 비준한 다음에 미국한테 가서 해 달라고 우리가 채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FTA라는 것은 우리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라 미 국한테도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鄭玉任 議員 의연하게 기다리면서 정치력을 발 휘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바로 그 점 동감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마지막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북한 핵 폐기 의지에 대해서 정부는 상당히 확신하고 있지만 이 발언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할 예정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으로부터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을 갖고 계 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미국으로 하여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미국의 목적은 북 한 핵무기를 검증 가능한 또 완전한 폐기에 있다 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鄭玉任 議員 자,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하는 것은 우리 국익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우려하듯 이 북한의 기존 핵은 인정해 주고 확산만 막는 정책이 가시화되게 되면 우리는 평생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야 됩 니다

이것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더군다나 오늘 오전에 원유철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북한 핵문제 때문에 우리의 평화적 원자로 이용도 지금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議員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 잘하십시오. 잘못해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鄭玉任 議員 들어가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鄭玉任 議員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출범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와 정치사회의 폭력, 북한의 공 세와 불확실한 정세로 국민의 닫힌 가슴이 더욱 오그라들었습니다.

이게 누구 탓입니까? 다 저희 탓입니다. 의사 당보다는 시위광장을, 법 절차보다는 해머와 난 장판으로 정치 품격을 곤두박질치게 만들며 민생 법안을 좌초시키려고만 하는 야당을 아우르고 제 어하지 못한 책임. 반성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좌편향 정권에 일방적으로 봉사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정체성의 혼란을 노정하며 실용정부의 비전에 낯설어 하는 관료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신명나게 일하도록 리더십을 다하지 못한 미숙함도 자성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이미 끝난 좌우 대결이 유독 대한민 국 땅에서만 유령처럼 출몰해서 남북관계와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일마저도 우리 잘못으로 하겠습 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민족을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좀먹는 선동과 발목잡기에 굴복 하고 포퓰리즘이 무섭다고 책임을 방기한다면 이 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경제 위기의 파고와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선진 대한민국을 후대에 남겨 주기 위해서는 소걸음으 로 뚜벅뚜벅 나가야 됩니다.

정부 요인들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은 대통령 뒤에만 숨어 있지 말고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서,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과감히 몸을 던지십시오. 용기와 자기 희생, 열정과 책임, 전문성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야만 국민들이 신뢰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의 리더십은 여러분의 역량에 달려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정옥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과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남구을 출신의 윤상현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북한이 플루토늄탄 제조를 최초로 완성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현재 북한은 약 40kg 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 6~7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양을 갖고 있다고 하나 그것이 실제로 핵무기를 제조했는지 안했는지는 추가적인 첩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그런데 제가 2003년도 10월에 나온 한국국방연구원의 '북한 핵문제 종합적 대처방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미북한은 1992년 이전에 1개에서 3개의 플루토늄탄을 제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때도 최초에 북한이 약 14kg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고 그때도 완성된 그러한 핵무기를 가졌다 하는 판 단은 국방부나 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의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북한이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 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 하고……

○윤상현 의원 플루토늄만 가지고 있지 핵무기 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추가적인 첩보로,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면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핵장치를 실험했습니까, 아니면 핵무기를 실험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핵장치를 실험했다 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것이 부분적인 성공이 었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면 최근에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2월 5일 리언 파네타 CIA 국장 지명자가 뉴클리어 디바이스(nuclear device), 핵장치가 아니라 뉴클리어 웨펀(nuclear weapon),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미국 측에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각각 다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클리어 웨펀(nuclear weapon), 뉴클리어 밤(nuclear bomb), 또는 과거에 뉴클리어 디바이스(nuclear device)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최악의 상태에서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연합사령관인 샤프 장군과도 제가 대화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무기를 폭파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게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입니다.

장관님, 지금 미 국방부하고 정보 협력하고 계 시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윤상현 의원** 긴밀히 협조가 되고 계십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윤상현 의원 그런데 2009년 1·2월 포린 어페 어즈(foreign affairs) 기고에 보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 고 서술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도 "세브럴 밤즈(several bombs)"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 그것도 미 국방부 차원에서 대비 태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상현 의원 아니, 그러면 대비 태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이게 뉴클리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CIA 국장 지명자가 얘기하고 또 국방부장관이 얘기하는데, 정보 협력이 한미간에 잘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게 무슨 한미 간에 정보 협력이 잘되는 겁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핵무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윤상현 의원 아닙니다. 장관님, 핵무기를 지금 도 개발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객관적 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저희는 군사적으로는 물론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관하여 상정을 하고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예, 그러셔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비대칭 보복 전략에 필요한 무기를 무진장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같은 것? 결국 국방부에서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윤상현 의원** 이게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이 만일 핵을 가졌을 것에 대비해서 그 징후를 판단하고 경고하고 타 격하고 요격하고 또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그러 한 것은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윤상현 의원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좀 외교부장관님처럼 말씀하시는데 국방부와 외교부는 역할이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군은 항상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경구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핵보유국의 전제하에 대응 전략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겠습니다.
- ○**윤상현 의원** 북한은 지금도 핵을 추가로 확보 하고 경량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윤상현 의원 북한이 현재 대포동 2호,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곧 여기에 탑재될 수 있는 핵탄두의 경량화를 완성시켰다는 강력한 위험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ICBM의 발사 능력이 있는 것과 핵무기를 소형화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윤상현 의원 그러면 왜 미국에서 그렇게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장관이 요격을 하겠다고 그러고 국무장관이 왜 그렇게 야단법석을 떱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갖는 것 자체가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 세계 평화에 위배가 되고 또 유엔 안보 결의에 위배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윤상현 의원 북핵은 일본 등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신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 실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물론 북한 핵과 장거리 미 사일이 동북아 여러 주변국에게 여러 가지 영향 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구체적인 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대개 MD 체제를 보다 더 발전 시키고 전력을 증강하고 또 이지스함의 탐지 능 력을 더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나 꼭 이것이 미사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핵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적시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 다.

○윤상현 의원 그러면 한마디로 북한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부추기는 반역 사적 책동의 주범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이 그러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윤상현 의원 북한 핵무장으로 인해서 한반도 의 군사적 불균형이 어떻게 심화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핵을 보유한다는 것 또 핵 보유를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전략적 우위를 점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불균형이 냐 아니냐 이러한 문제는 우리도 북한 핵에 대해 서 미국과 핵우산에 대한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탐지, 경고, 격파, 또 타격, 요격, 방어 이러한 능력을 우리 종합적으로 갖추 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균형의 깨짐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윤상현 의원 지금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북한 배들은 우리 영해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호출신호에 응하지 않 고 있습니다. PSI에 불참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 젠 정식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PSI와 관련해서 기존의 정부 입장은 PSI의 취지와 그런 의도는 잘 공감하고, 또 거기에 어떠한 수준으로 참가할 것이냐이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사항이고, 지금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핵을 개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군 사적으로는 참여 여부를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MD 참여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 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MD 참여에 관하여는 한반도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종심이 짧고 또 산악지형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MD 전체의 풀 스케일 참여라기보다는 한반도 특유의 공중공격 및 미사일에 대한 대비체제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갖추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비대칭 대량보복전략을 확보하는 것은 예방적 억지력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 심과제입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비대청적 보복전략과 관련 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예방적 억지력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보복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미 SCM에서도 확장적 억제개념에 의한 그러한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이 분명하고, 또 우리의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 그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 현재 우리 조건에서는 가장 필요한 대응수단이 미사일개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잠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밀성・거주성・독립성에서 뛰어난 작전능력을 갖춘원자력추진 잠수함의 개발이 요구되는데 추진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핵을 갖는다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가질 것인가 안 가질 것인가 이것은 현재로는 확보계획이 없으나 안보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국방 재원, 또 우리의 기술 등등을 고려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결국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런 부분입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은 최정예 잠수함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발을 감행한다면서해 NLL 지역 등에서 해저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도발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잠수함에 의한 침투도발 또 잠수정에 의한—잠수함과 유사한 잠수정에 의한—침투도발 또 잠수함이 실제로 어뢰 공격을 하든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 상정해서 한미연합감시체제로 이것은 추적하고 있고, 또 대잠항공기 초계활동도 하고 있고, 또 대잠작전능력도 저희 함정에 또 항공기에 보완을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윤상현 의원 1978년 이래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매년 명기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유효한 거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한 분명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최근에 북한 핵 무장을 전제하지 않은 작전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작전계획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희 한미 연합군은 분명히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를 대비한 그런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결국 개념계획의 명칭을 유지하되 작전계획 수준의 준비는 하고 계시다 이 말씀 이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외통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는 1999년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파기하는 것입 니다. 동의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이 약속에 따라서 미국은 2000년 6월에 북한에 대한 일부 경제제재를 해제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계속 미사일 발사를 했고, 지금은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라토리엄 파기 문제에 대응할 방안을 미국 정부와 논의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이미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이사회 에서 1695호, 또 핵실험 이후에 10월에 1718호에 의해서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발사 시험하지 못하 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만약에 북한이 미 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경우 유엔 제재가 발동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과거 핵은 감춰져 있고, 미래 핵 은 불투명합니다. 6자회담의 선 제거목표가 어느 쪽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핵무기를 완전히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은 2005년도 9·19 공동성명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나 2007년 2·13 합의는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 핵무기가 빠졌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단계적인 중간 단계를 중점적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 다.

○윤상현 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래 핵 제거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핵 문제 해결과 북한체제 보장을 맞바꾸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체제 보장이라는 것이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 다. 그것은 스스로의 문제기 때문에 핵 문제와 북한체제 보장을 바꾼다는 그런 표현은 현실적으 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에 넌-루가 프로그램을 적 용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 현재까지 북한에 년-루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문제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나 넌-루가 프로그램의 우 크라이나 모델을 상정할 경우에도 북한정권에 우 선은 민주화와 경제개혁, 즉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권좌에 있는 김정일 에게는 불가능한 가설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윤상현 의원 그래서 향후 북한의 권력이동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이를 설득할 한국의 외교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 습니다.

○윤상현 의원 지금 미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더라도 안보차원에서는 실체적 핵위협을 사실로 받아들여 비확산 쪽으로 목표를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즉, 비핵화와 비확산을 동시에 추구하지만 무게중심

이 후자 쪽으로 옮겨진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국은 공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미국의 목적은 분명히 북한의 핵 폐기라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나 막상 오바마 정부가 북한 과 협상에 들어가면 비확산 중심으로 교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된 목소리로 미국에 대해서 핵제거,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특히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 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 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 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엄연한 현실적 핵 무장 상 황을 전제로 외교안보전략을 재조정해 나가야 한 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과 대응수단 확보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핵 관련 모든 대비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핵 재난관리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 습니다.

○윤상현 의원 만약에 우리와 미국을 비롯한 국 제사회가 북핵 제거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고 장기적인 목표로서 우리가 그것은 계속적인 외교노력을 배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노무현 정권의 무책임한 북핵 대응 과정에서 한미동행이 약화된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미 신 안보선언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현재 지금 양국 정부 간에 21세기 전략동맹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미래동맹비전을 채택하는 문 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지난달부터 미국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비준함으로써 재협상 가능성을 제한하고 추후 있을 수도 있는 추가 협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 동의하시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1만 5000여 탈북자들이 지금 북한인권법의 조 속한 제정을 간절히 요청하며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그런 접근방법에서 접 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이라든지 남북관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 인민보안성의 지시로 지난해 12월부터 북한 전역의 양로원에 높이 2m 가량의 철조망이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이 극도로 열악해 이곳을 빠져 나가려는 노인들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합니다. 양로원 노인들마저 철조망에 갇혀 생사의 기로에 선 것 알고 계시죠?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존경하는 우리 윤 의원님 말씀의 내용을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 다마는 어쨌든 영유아나 노인들의, 취약계층들의 생활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북지원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과시용 지원이라든지 주민이 아닌지배층만 도와주는 지원으로는 북한을 도와줄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합니다.

다만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도 대북 투명성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함과 동시에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필품이라든지 농자재라든지 또 의약품 같은 것은 좀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정권은 한국을 핵 인질로 삼 으려 합니다. 이 인질범의 교시를 맹종하는 종북 주의자들은 정부 타도를 선동하며 끊임없이 대한 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정권이 걸어온 반역의 역사 그리고 그로 인한 참혹한 현실을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통일부가 종북주의 코드에 맞춰 조작과 왜곡에 앞장섰던 분야입니다. 어떻게 바로잡고 교육해 나가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통일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통일교육이 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오늘 대북단체들이 북한 돈을 반입하여 북한으로 띄워 보냈습니다. 비록 북한 돈반입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들이 이처럼 절박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떠나온가슴 아픈 사랑 때문입니다.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민족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탓도 있는만큼 지금까지 통일부가 그랬듯이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례 자제 요청을 해 왔고 특히 승인 없는 북한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정부 내 유관부처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이메일과 관련된 민주당의 의혹 제기, 이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메일 발송 날짜가 1월 30일에서 2월 1일 사이라고 하지만 메일이 발송된 것은 2월 3일 오전입니다. 맞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한승수 예, 2월 3일 오전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윤상현 의원 경찰청 인사청문회팀에도 이메일 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 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 사실은 없다고 들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청장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인사청문팀이 없었습니다. ○윤상현 의원 또 이메일 발송 후에 강호순 사건 보도 건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메일 전달 시점인 2월 3일까지는 방송 3사의 강호순 사건 뉴스 보도 건수가 평균 5.47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 4일부터는 1.67건으로 오히려 70%나급감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총리로서는 특정 기사를 놓고 언론의 보도 횟수를 분석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윤 의원께서 분석한 결과라면 맞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즉 이 아이디어는 언론보도에 영향을 주기는 커녕 현실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청와대의 조직적인 보도지침, 홍보지침이라고 터무니없는 뒤집어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청와대 지시사항이 개인 일개 행정관 명의로 보내집니까? 또 그것도 공문이 아 닌 이메일로, 그리고 그마저도 다음 사이트의 개 인 이메일로 전달합니까? 정부가 그렇게 일합니 까?

○국무총리 한승수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이메일 로, 그것도 행정관 명의로 전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상현 의원 그렇지요? 민주당은 이메일 이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왜 기록이 남는 이메일로 보냅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만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면 이메일이 아닌 다른 방법을 활용 했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 그래서 이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모적인 정치공세 를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불안을 확대하는 겁 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이제 사안의 실체가 밝혀졌고 또 문제를 일으킨 행정관이 사표를 제 출한 만큼 일단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 니다.

사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어렵습니다. 이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제일 먼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관련 법안이 하루속히 여야 합의하

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이제는 북한 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북한 핵무장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가공할 재앙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외교안보전략의 대전제가 바뀌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대응전략과 대비태세를 강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의 핵보유국 주장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북한 핵 보유국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오전 중에도 제가말씀드렸듯이 유엔안보리에서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 즉 북핵의 검증 가능한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이 북핵문제로 국론분열이 야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북한 핵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름의 민족공조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교묘한 선동논리에 적극 호응하고 영합함으로써 국론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정부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커지는 선동논리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러한 선동논리가 있다는 데 대해서 총리로서는 대단히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민족 공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 역내의, 동북아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의 안보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동시에 우리 안보에도 가장 심각한 위협 요소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은 물론이고 민족의이익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도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북핵 불용의 원칙을 공고히 견지하면서 북핵의 검증 가능한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윤상현 의원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그 아들은 권력세습에 반대하거나 체제에 불만을 표시하는 주민들을 북한에서 가장 척박한 양강도와자강도에 몰아넣고 식량배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듬해부터 4,5년간 북한에서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아사자가 집중적으로 발생된 곳이 바로 자강도,양강도입니다.

이렇게 집권한 신의 아들은 공포를 파는 장사 꾼이 되었고 그를 추종하는 종북 세력은 대한민 국의 위기를 먹으며 성장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또다시 온갖 선동으로 자기 공간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맞서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의 정통 성을 견고하게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지금은 위기 국면입니다. 위기 시에는 공직사회 전체가 그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만 혼자 뛰고 있습니다. 장관들 은 걸어 다니고 고위 공직자들은 기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몸을 던지는 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 가 위기를 돌파할 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생존에 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잘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국정 방해에 발목 잡혀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두려움을 버리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공직사회에 위기 돌파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총리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은 두려움을 버리고 행동할 때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뿐이다.'라고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내각은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 국무위원이 공동운명체라는 자세로 경제 위기를 능히 어떤 나라보다 제일 먼저 극복하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총리도 비장한 각오로 솔선수범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경제 위기돌파에 선봉장이 되도록 격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동토의 신과 그 아들이 63년째 북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죽고 압제만이 산 그 땅에서 그들은 또 다른 지옥의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든 폭압 통치 체제가 해체되지 않는 한 북한 주민의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북한 정권의 나팔수를 자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60년간 북녘 땅에서 얼마나 참혹한 반인간적 만행이 저 질러졌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갖은 궤변으로 대한민국의 역 사를 왜곡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의 무기인 천박한 욕설이 싫어 침묵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그렇게 우리 사회는 약해졌고 갈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침묵하면 거짓이 웃고 다시 배신이 승리할 것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 은 갈수록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수들도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의 연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훨씬 더 강해져야 합니다. 대한민 국은 훨씬 더 단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훨씬 더 정통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유 북한 을 위한 희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앞에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섰습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오늘의 대한민 국이 처한 위기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위기의 한 축은 북한이지만 우 리의 대응태세는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를 걱정하는 질문에 대해 총리와 외교·통일부장관은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오로지 국방장관만이 강력한 대응과 승리를 이야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지 모른다라는 국민의 걱정을 깊게 만드는 오늘의 상황입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은 동시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상황으로 볼 때에 국가 안보 프로그램은 곧 경제 발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위기관리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질문에서 확인된 현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은 근본적이지도 못하고 또실용적이지도 못합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또다른 국가 안보의 위기상황까지 겹쳐진다면 우리국민들이 감내해야 될 고통의 양과 질은 얼마나더 커지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월에 유엔총회에 참석하셨던 한승수 총리께서는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가 기꺼이 돕겠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노력을 예시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북한이 우선 대화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대통령께서도 그러셨고 저도 그랬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관계 현안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제의했었습니다.

○**박선숙 의원** 말만 하시고 기다린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뭐, 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의 진심이 북한에게 통해지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짝사랑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박선숙 의원** 그저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짝사 랑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짝사랑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만나지 않고는 쌍방의 입장을 아무도 모 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만나 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 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박선숙 의원 제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만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떻게 우리 정부의 뜻, 총리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 노력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오전 중의 답변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 참여정부 때도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까지는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정권이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뭔가 심사숙고해야 될 요인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때를 저희들은, 북한에게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오늘 질문에서 여러 차례 비핵개방 3000이 포용정책과 같은 기조라는 답변이나왔습니다. 심지어는 햇볕정책과 같은 기조라는답변도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다른 이름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이제는, 그런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요, 아시다시피 햇볕정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플루토늄의 축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그리고 지금은 당시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핵을 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남북관계가 더욱더개선이 될 거다 하는 뜻으로 그와 같은 원칙이제시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선숙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오전에서 부터 지금까지 비핵 개방 3000이 단계론이 아니 라고 이제까지 답변하셨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 가 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단계론이라기보다 이것은…… ○박선숙 의원 '비핵을 하면'이런 조건부와 단 계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국무총리 한승수 단계론이라기보다 이것은 원칙인데요. 비핵이 뭐냐 하는 것은 통일부장관도설명드렸습니다마는 6자회담에서의 제2단계, 즉핵의 불능화 단계가 끝나는 것을 비핵화 단계로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비핵 개방 3000의 입안 주도자이며 "개성공단 확대하면 정부 부담만 커진다." "기업 이윤을 못 내니까 세금만 더 들어간다." 이런 말 씀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총리께서는 이분을 제 청하실 때 이런 점에 대해 고려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현인택 통일부장 관은 이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업적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이 주장하는 원칙에 대해

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이고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분야에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고 하기 때문에앞으로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적임자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하고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개성공단 확대하면 정부 부담만커진다." "세금만 더 들어간다" 이러한 인식은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비핵 개방3000에 대해서는 이론적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이제 와서 정정을 했습니다만.

총리께서는 개성공단 가 보신 적 있습니까?

- ○국무총리 한승수 예?
- ○박선숙 의원 개성공단 가 보신 적 있으세요?
- ○국무총리 한승수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 ○박선숙 의원 개성공단 사업자 대표들이나 기 업들 만나 보신 적 있으세요?
- ○국무총리 한승수 관리공단이사장도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개성공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 ○**박선숙 의원** 관리공단이사장은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이고요. 사업자들을 한번 만나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한국일보에 기사가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만 '불황의 무풍지대, 개성공단으로 오세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개성공단에서 제조되는 제품들이 수출 주로 하는데 국내에도 물론 수요가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거기에서 생산한 것을 자체 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대한민국으로 들여와서 여기에서 소비되든가 수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경제와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자연히 개성공단도 일부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걱정입니다.

○박선숙 의원 경쟁력은요, 일단 시설비용이 저렴하고 인건비가 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이 활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기본인식에 대해서 만약 중소기업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총리께서나 아니면 통일부장관께서나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총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부담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이 경제이익에 합당하도록 활동하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의이윤율을 많이 높이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총리께서 지난 금요일 대정부질 문 답변에서 통일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충분 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고 답 변하셨는데 사실관계를 정정하겠습니다. 후보자 가 여러 가지 정상참작의 설명을 했으나 야당 의 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탈법과 불법은 저희가 납득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명백하게 사실로서 존재하지요.

저희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에 허위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의로 행안부에 주민등록법 위반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가 갑니다. 유권해석 질의의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유권해석 질의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원 명의로 물론 했지만요, 하고 행안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권해석 질의가 오면 담당자가 전결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차관, 장관께 보고드리게 돼 있습니다, 적법하지않은 답변을 저희에게 보내 왔습니다. 기록으로 있으니까……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총리는 모르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공직기강 차원에서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지적 드린 내용에 대해 복지부장관, 행안부장관 그리고 당사자인 통일부장관이 어떻게 이런 사실관계의 왜곡조작에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시어 보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자료를 저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보고해 주세요.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고개를 끄덕임)

○**박선숙 의원** 다시 남북관계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정책이라는 게 주변 국가들과의 합의

가 있어야 되는데 오바마 정부는 대화를 통한 협 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혼자만 기다리는 정책을 취하면 고립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한승수 오바마 정부도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박선숙 의원 오마바 정부는 6자회담과 북·미양자 직접대화를 동시에 추진하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일 이고요.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 아소사이어티에서 연설한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직접 한다고 하는 얘기보다는 6자회담을 오바마정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북핵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두 가지 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6자회담만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요. 두 가지를 다 추진하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6자회담도 하고 남북관계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따로 남과 북이 만나서 하려고 하는데……

○**박선숙 의원** 꼭 하셔야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이에요.

○박선숙 의원 꼭 하셔야 돼요. 그것을 꼭 안하시면 6자회담에만 의존하고 미국이 어떻게 북한과 대화하는가만 기다리다 보면 그러면 고립될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절대로 그렇지를 않고 요

지금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한민국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아직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박선숙 의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동안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 시를 하지 못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예시할 만한 노력을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 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도 연설하실 때도 그러고 이미……

○**박선숙 의원** 그것은 말만 한 거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 제의

를 했는데 이제는 북한이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측만 얘기하시지 말고 북한에 대해서 도······

○박선숙 의원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대한민국 정부가 제의한 데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답을 하라 그렇게 좀 말씀 을 해 주세요.

○**박선숙 의원** 그것은 제가 할 일이고요, 총리 께서는 총리가 하실 일을 하셔야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지금까지 최선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저의 판단을 말씀드렸고 더 노력하셔야됩니다.

경제난으로 사회 전체가 힘든데, 특히 중소기 업 하루하루 피 말리는 전쟁 같은 날에서 북한과 대화하기 싫어서 개성공단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 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이 지요.

친 중소기업 정책인 개성공단을 이데올로기나 정치논리의 희생양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개성 공단이 문을 닫으면 그 기업들만 손해가 아니라 안보리스크도 올라가지요.

지난 10년의 성과를 무(無)로 돌리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말로는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결국 남북관계는 대한민국 경제에 직접 영 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 북 간의 핫라인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오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하면 요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LL에서의 우리군의 대비태세, 오늘 국방부장관 말씀 들어보면 강력합니다. 북한도 과거 부시 정부와의 대결구도에서처럼 벼랑끝전술을 버리고 협상의 장으로나와야 합니다.

오바마 정부도 대화를 제기했고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 상황이 변했다는 말은 북한과 남한 우리 측 정부에 동시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남한도 북한도 적응하지 못하면 실패를 반복하게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우리의 장래를 그저 미국에 의존하고 남이든 북이든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꼴이 되지 않겠 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남북관계에 관한 한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로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제3국 의 개입 없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싶고 또 그런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이 함께 성장하고 번 영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박선숙 의원 행동하실 때입니다. 무슨 행동이든 행동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지금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때라고 봅니다.

제가 그 행동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단체들이 김정일 위원장 생일에 맞춰서 삐라 살포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박선숙 의원 거기 북한 지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박선숙 의원 교류협력법 위반인데 왜 처벌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상호 비방・중상 자제 조항의 근거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직접 규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아니, 그 말씀 아니고요. 북한 지폐요, 북한 지폐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임은 방금 전에 나오셨던 한나라당 의원님도 지적하셨어요, 처벌하시자는 주장은 안 하셨지만.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서 적절히 조사해서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박선숙 의원 적법하게 처벌하셔야 되는데 관계기관인 통일부에서 유감 표명만 하시더라고요, 아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오늘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조치를 취하기에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선숙 의원 불법행위를 할 것을 그 당사자들이 예고했는데, 불법행위를 할 것을 예고하는데도 처벌하지 않고 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서 보겠다고 하시는 말씀 자체가 법의 적용을보류하고, 그 자체는 위법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실제적인 행동이 일어 나기 전까지는 예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범법 행위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선숙 의원** 오늘 뿌렸습니다. 처벌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그것은 우선 조사를 해 봐 가지고 범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박선숙 의원** 범법행위가 있다고 이미 적시해 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그것은 존경하는 박선 숙 의원님께서 하신 것이고 실제로 상황이 어떤 지 객관적인 상황을 알아보고 해야 할 것……

○박선숙 의원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이 이전에 국회에서 여러 차례 답변했습니다, 북한 지폐를 포함하면 처벌하겠다고. 이 정부가, 같은 정부의 장관들이 약속한 것을 왜 대답 못 하십니까, 총 리께서?

○국무총리 한승수 이번에 보냈다는 보고만 들었지, 지금 보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선숙 의원** 오늘 보냈습니다.

아니, 그 보고를 총리께 아무도 안 드립니까, 총리실은? 대정부질문에 나오시는데요?

○국무총리 한승수 대정부질문에 나오기 전까지 저는 직접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박선숙 의원** 오늘 뿌렸다고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

총리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요.

북한이 1월 성명을 통해서 전면대결 태세의 진입을 천명하고 모든 합의 무효화 선언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직접적인 무력행동을 제외하고는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쌍방 간의 합의나 협정이나 선언은 일방의 파기로 파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있는 선언이라든가 협정은 북 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해서 파기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파기될 수 있 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선숙 의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총리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6·15 정상선언이나 10·4 합의도 우리가 합의를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아무리 말해봐야 한쪽이 말한다고 파기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거꾸로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질문은 뭐였냐 하면 북한이 지금 1월 달에 계속 하고 있는 말들은 말로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가장 강경한 조치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여쭈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발표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 다.

○박선숙 의원 지난 12월 1일 북한은 개성공단 출입제한 등의 12·1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 조치가 남측 일부 단체들의 삐라 살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개성공단 출입 제한의 조치에 얼마나 영 향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작년 10 월에 북한 측에서 군사실무회담 시에 삐라 살포 가 계속될 경우에는 개성공단 등에 엄중한 결과 가 있고 통행이 원활히 이루기 어렵다는 이와 같 은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북한은 그렇게 주장하지요. 제가 예상하기에 다음에 우리가 이 삐라 살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우리 법에 의거하여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다른 행동의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그것은 예단해서 가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지않도록 종용은 지금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태가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문희상 부의장, 김형오 의장과 사회교대)

○박선숙 의원 아니, 그런 일반적 답변이 아니고 오늘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법에 따라 처벌하셔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 답변으로 가실문제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TV토론에서 대북 삐라 문제와 관련하여 사소한 문제로 북측 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같은 대통령 말씀에 대해 후속조치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저는 어떤 계제에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선숙 의원 아니, 총리가 대통령 말씀 하시 는 것 안 듣습니까?

대통령께서 TV에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TV 를 다 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바쁜 사람입니다.

(「바빠도 총리가 대통령 말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얘기해요! 뒤에서 떠들지 말고 품 위를 좀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

(「똑바로 답변하세요, 성실하게!」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박선숙 의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으로 걱 정됩니다.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거듭 거듭 챙기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총리께 서 하신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실 수는 있 을지 몰라도 만약 그것이 정식으로 하신 말씀이 면 저는 취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총리가 직접 못 듣더라도 내각에서 그것을 추진 하고 이행하는 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일일이 어떻게 다 총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가지고 그대로 합니까?

그러나 내각은 충분히 그와 같은 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숙 의원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셨어야 맞습니다. '후속조치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드 렸을 때 '저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내각이 그런 팀이 있으므로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다음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맞지요.

(「차기 총리감이다」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한승수 제 답변으로 박 의원님의 말씀을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박선숙 의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2월 9일 라디오 정례연설에서 '남북관계 걱정 안 해도된다'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최근 북한의 잇단 위협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잘 알고 있다, 국민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뭘 믿고 그러시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로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마시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여러 가지로 위협적인 이와 같은 선언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단결하고 있고 똘똘 뭉쳐 있다, 그러면 걱정이 없다'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저도 군대갈 나이의 아이를, 아들을 가진 부모로서 정말 걱정이 크고 대통령 말씀대로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경제위기 오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지난해 내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겁부터 나는 게 국민들 심정입니다. 더군다나 남북관계, 우리 이 땅에 군대 보내는 부모들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넘어갈수 있는 문제입니까?

실제로 이러이러하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것은 국방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고 남북관계를 우리가 어쨌든 북한을 더 이상, 대화의 틀에서 나와 있는 북한을 대화 로 끌어오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걱정하지 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총리께서 유엔총회 출장 시에 호화 호텔 숙박 논란이 벌어졌는데 오늘 한겨레21에 반론보도를 실으셨더라고요, 이렇게요.

월도프 아스토리아(Waldorf Astoria) 스위트룸 에는 누가 묵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서 국민들이 총리에게 갖고 있는 이와 관련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선숙 의원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간지에서 2월 23일자로 '알려드립니다'하는 내용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내용은 '총리가 호텔에서 숙박하지도 않고 유엔 대사관저에서 숙박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음을 확인했다'하고 기술하고 있고 또 '호텔방도 총리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다른 저렴한 곳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록돼 있음을 확인했다'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작년 말에 이 보도가 나온 뒤에 총리실에는 이 모 잡지사 측에 보도가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면서 정정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었습니다. 그 외 수차례에 걸쳐서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총리실과 외교부에 와서 관계자를 취재하고 당시오간 문건과 이메일, 관련자료 등을 모두 확인한뒤에 이런 내용의 사실상 정정문을 보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그 잡지사 측에 대해서 필요하면 뉴욕 현지를 취재하겠다면 취재를

협조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작년 보도 당시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사실상 정정으로 인해서 오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아울러서 정정문이 게재됨으로써 오보로 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총리에 대한 독자들의 오해도 해소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총리가 단순히 얼마짜리 호 텔에 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총리가 무슨 활동을 했느냐,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3박일 간의 유엔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전에 두 분의 총리가 다녀오신 것보다, 그분들 십여 건의 행사를 했는데 저는 25건의 행사를 하고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유엔총회 의장을 좀 하면서 아는데 유엔총회 기간 동안에는 41가부터 45가까지 완전히 자동차 차단을 하고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도프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데는 정상들이 한 50명 모였기때문에 모든 회의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편합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세 시간, 네 시간씩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장소로 정상들이 다 와 있고 한 그런 것을 기자들이 알았다고 그러면 그런 기사는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 돼서 저는 거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런 문제에 대한 오해는 많이 좀 풀어 주시기 바 랍니다.

○박선숙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안타까운 건 오늘 게재한 반론 보도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질문하려고 했고 그에 관해 시간이 없 어서 질문을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감사합니다.

○박선숙 의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사실과 다른 반론문을 내셨는지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은 위기를 관리하는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부의, 대통령의 행동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오** 박선숙 의원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

○**김영우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 연천 출신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비롯 된 세계적 경제위기로……

○**의장 김형오** 김영우 의원 잠깐만……

좌석에서 정리 좀 해 주세요. 지금 질문 중입 니다.

○김영우 의원 지금 우리 경제는……

○**의장 김형오** 조금만 있으세요.

자, 지금 질문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질서 좀 지켜 주세요.

자, 시작하세요.

○김영우 의원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적 경제 위기로 IMF 때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담당하는 우리 군의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국방정책 개념에서 벗어나 안보도 확립하고 경제회복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국방 뉴딜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국방 뉴딜정책의 내용을 다음과 같 이 제안합니다.

첫째 과감한 국방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의 신장, 둘째 군 훈련장과 사격장의 합리적 통폐합과 군 유휴지 활용을 통 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셋째 접경 지역에서의 생태공원 조성과 역사박물관, 안보체험장 건립 등을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 넷째 국내 방위산 업체의 기술력 강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증대 등 입니다.

이러한 국방 뉴딜정책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국

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차 원의 민·군협력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군 병력과 무기에만 의존하거나 일방적인 안보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군이 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민이 군을 신뢰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안보에 불과합니다. 민과 군이 협력하여 안보도 확립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과 군이 하나가되고 안보와 경제가 서로 윈윈하는 국방 뉴딜정책을 제안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이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전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전력배치가 과거 1차, 2차 연평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이례적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엇비슷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의 기본적인 전력배치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영우 의원 지난달 남북 간의 합의사항 폐기 나 NLL 관련한 북한의 강경발언 이후에 지금까 지 북한이 NLL을 조금이라도 침범한 사례가 있 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난 2월 초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관 고장 북한 어선을 단속하기 위하여 NLL을 한 0.2마일 정도 침범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그것은 단순한 사고였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때 북한 어선이 엔진 고 장을 일으켜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영우 의원 미국은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미사일을 요격할 것이라는 보도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영해 상공에서의 국지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의 군사적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영해 상공이라는 것이 어느 영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우 의원 그러니까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 미사일을 미국이 요격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요격지점이야 알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상공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국지전 형태가 되지 않는 나 이러한 질문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미국이 미사일을 요격한다 면 그것은 아마도 공해상의 상공이 될 것으로 보 고, 미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 본토를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때 그 시기나 이러한 것은 미국에서 판단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국지적인 도발상황, 미국에 대한 도발 상황 이것보다는 만일그것이 요격이 된다면 북한이 오히려 다른 어떤도발행위나 또는 6자회담 같은 데서 태도를 바꾸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결과는 예측할 수있을 것입니다.

○김영우 의원 그러한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군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우리 군은 그러한 요격을 했을 때 그것에 부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을 감시·추적하고 또 추가적인 다른 양태, 도발 양상이 있는가 이것을 추적하고 만일 그러한 도발 양상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다음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핵무기 개발 직전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 우리의 대응방법은 아마도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것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은 유사시에 우리에게 핵우산 제공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김영우 의원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군으로 환수가 되지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그런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한미 군사동맹이 유지되는 한 그것은 분명히 제공될 것입니다.

○김영우 의원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최 근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8군사령부가 계속 한국에 주둔하도록 미 육군에 건의했다고 했습니 다.

장관께서는 미8군사령부가 계속 한국에 주둔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샤프 장군이 미8군사령부가 그대로 잔류하는 것을 미 육군에 건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사령부급 구조를 어떻게할 것인가 하는 것은 비단 한반도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세계 전 지역에서의 미군에 대한 작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미 육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갈 사안이고 아직 그것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본 의원은 비행안전의 문제는 기

본적으로 비전문가인 보통사람이 비행기를 타면서 고층빌딩을 바라볼 때 느끼는 불안감이라든지 공포감을 기준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뮬레이션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시뮬레이션 시험비행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어떤 의원님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고층빌딩이 들어서도 정말 평시와 그리고 전시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 다마는 우리 공군은 작전 중 운용과 비행안전이 라는 두 가지 문제를 언제고 도외시한 적은 없습 니다.

따라서 이번 이 문제도 법과 그다음에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비행절차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공군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영우 의원 사고위험이 있다면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연구 결과도 나온 것 같은데 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사고위험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한 것이 있어서 극히, 아 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희소하게 나오 는 경우이기는 하나 사고의 개연성을 가지고 법 적 또는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사고라는 것은 비행기 활주로 자체에서 날 수도 있고 또 비행기 인근 울타리에서 날 수도 있고 그 주변에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확률적인 문제이지 사고의 개연성을 저희가판단의 기초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의원 지금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특정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다라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혜가 맞습니까, 아니면 오해에서 비롯된 주 장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군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민원을 저희가 처리를 할때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비용이 든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원인제공자부담원칙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다른 기업이 민원을 제기해도 아마 마찬가지 결과이기 때문에 특혜라

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우 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롯데가 됐든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아니면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형태가 됐든 제2롯데월드 신축과 똑같은 상황에서는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고층건물 신축에.

○국방부장관 이상희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 ○김영우 의원 동의하십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동의합니다.

○김영우 의원 본 의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은 법제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 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툴게 접근을 하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 과 관련해서 법과 규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군사 시설과 관련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고통과 불편 을 겪어 왔던 다른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함께 고려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를 계기로 군사시설 주변지역이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더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전에 지장이 없거나 또는 군사적인 조정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규제지역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듯이 국 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여 러 가지 규제를 매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은 해제해 나가고 있습 니다.

이번 이러한 사항도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도 얘기했듯이 기지주변에 어떤 추가적인 해제 요건이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에 착수해서, 이것은 합참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고 각 기지에서도 검토를하고 또 용역도 주고 해서 여러 가지 다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김영우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방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그리고 국방규제 완화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것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국방부가 지난 9월, 15km의 통제보호구

역을 10km로 조정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통제보호구역은 이미 현실적으로는 15km보다 줄어든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대부분 산악지형이기 때문에그 효과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접경지역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좀더 탄력적 으로 통제보호구역이 축소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 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합참에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이나 또는 극히 작전 운용에 지장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싸우는 방법까지 바꿔서라도 추가적으로 해제할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도 검토를 해나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그렇습니다. 인구가 밀집돼 있는 마을하고 완전히 산악지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띠 개념으로 통제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민통선을 드나들면서 농사짓는 그런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큰 불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그리고 지난 1월 2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접경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멧돼지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고,특히 민통선 내에서 수렵을 할 수가 없어서 국방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인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죽 확인을, 규정과 법을 확인해 보았는데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 제9조에 그것을 지역 지자체와 관할 부대장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어느 지역이 피해가 많고 또 어디에 산돼지가 많이 출몰하는지 이것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당 부대장 에게 제기를 해 주시면 이건 협의를 하여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우 의원** 다음은 국방부 소유의 군 시설과 토지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군이 과거에 필요에 의해서 징발을 해놓고 지금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군 시설과

토지가 전국적으로 너무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활용이 미비한 그런 군 유휴지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지금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저희가 군 유휴지는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시에 사용을 위해서 확보한 것이 있고 또 육·해·공군의 부대 이전이나 시설 이전에 따라서 생기는 게 있고 주한미군기지 반환 자산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대개 개략적으로, 한 800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개략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그렇습니다. 일산 신도시나 분당 신도시보다도 훨씬 큰 군 유휴지가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또 미군이 소유한 유휴지도 350만 평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국토가 방만하게 이용돼서 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약 1만 7000평 규모의 군비행장 시설입니다. 미군이 군비행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10여년 전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가끔씩 헬기만 이착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거의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약 8100평 규모의 비행장 사진입니다. 주민들의 중언에 의하면 이 비행장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군부대 관사 사진입니다.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도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이런 폐관사들은 종종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군부대 관사터입니다. 아주 흉 물스럽게 그대로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용치'라고 하는 시설물입니다. 장관 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김영우 의원 적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콘크리트 장애물인데요. 설치된 지가 3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옆에 큰 도로가 나 있어서이 하천 옆에 용치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름에 비가 좀 많이오면 이 용치에 쓰레기, 나뭇가지 같은 것이 많이 걸려 가지고 물의 흐름을 막아서 역류 현상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좁은 2차선 도로에 있는 대전 차 방호벽 사진입니다. 이 방호벽 때문에 도로에 항상 그늘이 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이 방호벽 밑에 있는 도로 부분이 항상 빙판길로 변 하는 데다가 또 길도 갑자기 좁아져서 교통사고 가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인근에 4차선 도로가 많이 있어서 이 방호벽도 대전차 저지 역할을 하 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대나 관사 등 국방부 소유의 군 시설이나 군 부지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 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널려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현황 파악과 함께 국방부 소유의 군 시설 및 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겠습니다.
-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먼저 통일부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통일부장관 현인택** 감사합니다.
- ○김영우 의원 지금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이라는 대북정책 때문에 남 북관계가 경색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제1·2차 서해교전, 대포동 1·2호 발사 실험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등 참으로 공포스러웠던 그런 북한의 대남 위협 행위가 어느 정권에서 일 어났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 있 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영우 의원** 소위 햇볕정책을 펼쳤던 과거 정부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 간에 사람이 오고 가고 그리고 축전에 초청돼서 북한을 방문하고 하는 일은 물 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북 경색이 라는 말은, 겉으로는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만 군사적으로 실질적인 도발을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남북관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도 존경하는 김영우 의 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영우 의원 장관께서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다듬은 그 주역의 한 분이신데 상생·공영 정책하고 비핵 개방 3000 구상,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상생·공영의 큰 틀 속에 또 비핵 개방 3000 정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북한의 대남 위협 공세에 맞서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북정책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저희 정부는 차분하고 의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대비태세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유엔이나 북측과의 협의나 참여 없이도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의 접경지역벨트에서는 생태공원을 만든다든지 역사박물관과 기념관, 그리고 안보관광체험장 등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낙후되어 있는 접경지역 개발 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마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라든지 상황 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 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방부장관께 질문했듯이 국방 규제가 아 직까지 국민들의 삶에 불편함을 끼치고 있고 국 방부 소유의 군 시설과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운 영되고 있습니다. 민과 군의 공동체 의식을 확고 히 하고 새로운 국방 뉴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방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민군협 력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모든 부처가 경제회복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 분야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7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국방정책이 당면한 경제회복보다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군협력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군사보호시 설을 대폭 해제하는 등 민과 군 간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히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지만 반대로 경제가 살아야 강한 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군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가경제가 다시 군이 강해지도록 만드는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과군이 협력하여 국방뉴딜정책을 실현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안보와 경제가 서로 윈윈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전에 끝 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의원님들 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 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 의원(282인)

강 명 순 강 기 정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용 석 강 운 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공성 진 곽 정 숙 구 상 찬 권 선 택 권경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금 래 김기현 김 낙 성 김 노 식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선 동 김성 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회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용구 김 영 진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률 김 진 표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태 환 김 학 용 나 경 원 김 효 석 김 효 재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국 현 문 희 상 문 학 진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돈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선 숙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워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서 청 원 손 숙 미 송 민 순 성 윤 환 송 광 호 송 영 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상 진 신 지 호 신 학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정 례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성엽 유 원 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두 환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 강 래 이경재 이계진 이 군 현 이 낙연 이 명 규 이명수 이미경 이 범 관 이상득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시종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경 이 용 삼 이용희 이 윤 성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재선 이 인 제 이 종 걸 이정현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 진 삼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임 두 성 임 영 호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장 제 원 전 병 헌 전 여 옥 전 현 회 전 혜 숙 정 두 언 정 갑 윤 정몽준 정미경 정 병 국 정세균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성 영 주 승용 주호영 진 수 희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천 정 배 최경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문 순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최 철 국 한 선 교 허 범 도 허 원 제 허 태 열 현 경 허 천 병 현기환 홍 사 덕 홍일 표 홍 재 형 홍 정 욱 홍 희 덕 황 영 철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개의 시 재석 의원(102인)

강 석 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성천 강 창 일 고 흥 길 강 운 태 곽 정 숙 구 상 찬 권 영 길 김 광 림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낙 성 김성순 김성식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재 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형 오 류 근 찬 문 국 현 박 근 혜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지 원 배 영 식 배 은 희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유성엽 유 일 호 유 두 화 유석용 이 상 민 이 애 주 이 윤 석 이 인 기 이 재 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진복 이 춘 식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화수 임 두 성 장 광 근 임 동 규 장 세 환 전 여 옥 정 갑 윤 정미경 정양석 정 장 선 정진석 정 하 균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영 택 조 경 태 조 전 혁 조 원 진 조 진 형 주 호 영 천 정 배 최병국 최 연 희 진 옂 최 재 성 허 천 현기환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홍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속개 시 재석 의원(68인)

강 기 정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승 규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영 길 김 낙 성 김 부 겸 김성순 김 소 남 김 영 우 김용구 김 재 윤 김 춘 진 김충조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희 철 나 경 원 노 영 민 박 대 해 박 상 돈 박 영 아 박은수 박 지 원 배 영 식 백 재 현 변웅전 성 윤 환 신 상 진 신 학 용 심대평 안 규 백 안 효 대 양 승 조 우 유 근 워 희 목 유 재 중 이 명 규 이명수 이 범 래 이재선 이 윤 석 이종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해 봉 임 동 규 임 두 성 이혜훈 이 화 수 장 광 근 전 현 희 세 균 정 옥 임 정 정의화 정 장 선 정 해 걸 주 광 덕 차 명 진 최병국 최 연 희 진 영 한 선 교 허 첡 홍 사 덕 홍 재 형

○산회 시 재석 의원(93인)

강 기 정 강 명 순 강 창 일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김 금 래 권 선 택 김 부 겸 김 노 식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순 김성수 김 성 조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장 수 김 유 정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학 용 김 형 오 노 철 래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숙 박 영 아 박 지 원 서 갑 원 서 병 수 송 영 선 심대평 신 성 범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원 유 철 유선호 유성엽 유 일 호 유 재 중 이계진 이미경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애 주 이용희 이 유 석 이 성 남 이진복 이 은 재 이 인 제 이종혁 이 해 봉 이 춘 석 임 두 성 임 태 희 전 병 헌 전 현 희 혜 숙 정세균 전 정 옥 임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주 호 영 정 해 걸 조 전 혁 차 명 진 최병국 진 수 희 최규성 최영희 최 재 성 최 철 국 최 연 희 추 미 애 허 원 제 허 천 현 기 환 홍 재 형 황 영 철 홍 사 덕 홍 준 표 황 진 하

○청가 의원(3인)

박종희 이광재 홍장표

○국회사무처

무 사 총 장 박 계 동 입 법 차 장 안 병 옥 후 의 사 국 장 종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한 승 수 외교통상부장관 유 명 환
 통 일 부 장 관
 현 인 택

 국 방 부 장 관
 이 상 희

○출석 정부위원

행정안전부

 제 1 차 관
 정 창 섭

 제 2 차 관
 강 병 규

【보고사항】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특별	최영희	•	민주당	2009. 2. 13

○의안 제출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안민석·김영진·김재윤·김진표· 김춘진·김효석·양승조·이미경·송민순· 최규성·최영희·최재성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2009. 2. 13 안민석·권영길·김영진·김재윤· 김진표·김춘진·김효석·양승조·이미경· 송민순·최규성·최영희·최재성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김춘진·양승조·박은수·최재성· 김영진·안민석·김상희·이석현·백재현· 이미경·서갑원·송민순·문학진·김재윤 의 원 발의)

韓國大學敎育協議會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 원 대표발의)

(2009. 2. 13 김춘진·양승조·박은수·최재성· 김영진·안민석·김상희·이석현·백재현· 이미경·서갑원·송민순·문학진·김재윤 의 원 발의)

韓國專門大學敎育協議會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김춘진·양승조·박은수·최재성· 김영진·안민석·김상희·이석현·백재현· 이미경·서갑원·송민순·문학진·김재윤 의 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발의) (2009. 2. 13 최재성 의원 외 81인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발의) (2009. 2. 13 최재성 의원 외 81인 발의)

이상 7건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장광근·이한성·백성운·손범규· 이인기·허천·정희수·김정권·박상은· 임동규·공성진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성운 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백성운·홍장표·신성범·이춘식· 김효재·김영우·이윤성·정두언·권택기· 정태근·박대해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6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최경환·이한성·정양석·장윤석· 백성운·나성린·유승민·김효재·강길부· 김광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 표발의)

(2009. 2. 13 최경환·나성린·강길부·김재경· 안효대·안홍준·임태희·한선교·이정현· 윤상현·장윤석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성운 의원 대표 발의)

(2009. 2. 13 백성운·신성범·이춘식·김효재· 홍장표·김영우·이윤성·정두언·권택기· 박대해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회 의원 대 표발의)

(2009. 2. 13 진수희·공성진·안효대·원희목· 안경률·김재경·김금래·이종구·조문환· 박준선·강길부·김정권·나성린·정양석· 김광림·배영식·김효재 의원 발의)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이성남 의원 대표 발의)

(2009. 2. 13 이성남·홍재형·강창일·전병현· 김우남·김재윤·김효석·김성곤·최문순· 이시종·박은수·이석현·이미경·김영진· 김동철·김상희·전현희·최철국·박선숙· 박주선·신학용·백재현·송민순·이용섭 의 원 발의)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일부개정 법률안(이성남 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이성남·홍재형·강창일·전병현· 김우남·김재윤·김효석·김성곤·최문순· 이시종·박은수·이석현·이미경·김영진· 김동철·김상희·전현희·최철국·박선숙· 박주선·신학용·백재현·송민순·이용섭 의 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이종구·강길부·김광림·김성식· 김재경·나성린·배영식·안효대·정양석· 진수희 의원 발의)

이상 7건 2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 표발의)

(2009. 2. 13 심재철·정진섭·박준선·정병국· 차명진·이범관·주광덕·윤상현·김태원· 원유철 의원 발의)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 표발의)

(2009. 2. 13 손숙미·이한성·원희룡·안홍준· 김충조·황우여·김성회·임두성·이달곤· 이춘석 의원 발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 표발의)

(2009. 2. 13 전현희·송영길·장세환·이석현· 양승조·최영희·문학진·이춘석·백원우· 최인기·박민식·박은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6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이진삼 의원 대표 발의)

(2009. 2. 13 이진삼·임영호·김창수·김충조· 심대평·김낙성·류근찬·박상돈·이명수· 김용구·권선택·변웅전·박선영·이상민· 이재선·김옥이·서종표·정해결·정병국 의 워 발의)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軍行刑法 전부개정법률안**

(2009. 2. 13 정부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 발의)

(2009. 2. 13 최규식·김우남·최재성·장세환· 강창일·박은수·백원우·전병헌·송영길· 김효석·양승조·유원일·이시종·강기정· 김성곤·이용삼·김상희·유성엽·나성린· 김영진·김영록·김희철·이화수·신낙균· 서종표·김진표·홍재형·김충조·김종률· 박지원·이정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섭 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정진섭·노철래·허범도·김성회·

차명진 · 권영세 · 이화수 · 박준선 · 조원진 · 강성천 · 이경재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정진섭·이윤성·허범도·김성회· 차명진·권영세·이화수·박준선·조원진· 강성천·이경재 의원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김진표·김상희·김영진·김용구· 김재윤·김효석·노영민·박은수·서갑원· 송영길·신학용·양승조·우윤근·원혜영· 조배숙·최재성·추미애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 표발의)

(2009. 2. 13 정진섭·이윤성·허범도·김성회· 차명진·권영세·이화수·박준선·조원진· 강성천·이경재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정진섭·이윤성·허범도·김성회· 차명진·권영세·이화수·박준선·조원진· 강성천·이경재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09. 2. 13 김영우·백성운·김장수·이성헌· 김성수·황영철·안상수·남경필·권택기· 김옥이·박영아·조진래·송훈석·나성린· 권영진·정태근·이화수·이정현 의원 발의) 2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래 의원 발의)

(2009. 2. 13 이강래 의원 외 81인 발의)2월 1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의안 철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2009. 1. 30 심재철·정진섭·박준선·정병국· 차명진·이범관·주광덕·윤상현·김태원· 김용태·원유철 의원 발의)

2월 13일 발의자 철회 요구